



정책자료 2023-06

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인구정책기획단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임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책자료 2023-06

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60-7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f.2023.06>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2023년 센터 운영의 방향성 설정 논의	1
제1절 2023년 추진 과제	3
제2절 연구자문위원회 회의	5
제3절 인구정책기획단 정례회의	11
제4절 인구정책기획단 워크숍	66
제2장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사업 과제 계획	69
제1절 개요	71
제2절 연구과제별 계획	73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사업 성과	93
제1절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발행	95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99
제3절 인구포럼 운영	108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연구과제 성과	115
제1절 인구정책기획단 2023년 수행 과제	117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세부과제별 내외부 평가	119

표 목차

〈표 1-1〉 연구 영역별 2023년 추진 과제	4
〈표 2-1〉 연구 영역별 2023년 추진 과제	72
〈표 2-2〉 202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사업 착수워크숍 일정	73
〈표 3-1〉 2023 인구포럼 진행 일정	108
〈표 4-1〉 인구정책기획단 2023년 수행 과제 목록	117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우리원의 전사적 인구연구 수행 구도	20
[그림 1-2] 인구정책연구를 위한 인력 운영체계의 기본 구도	22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2023년 센터 운영의 방향성 설정 논의

제1절 2023년 추진과제

제2절 연구자문위원회 회의

제3절 인구정책기획단 정례회의

제4절 인구정책기획단 워크숍



제 1 장 2023년 센터 운영의 방향성 설정 논의

제1절 2023년 추진 과제

□ 2023년 세부과제 편성 개요

○ 연구과제(18개 과제)

- 인구현상 심층 분석 관련 6개 연구과제, 저출산 현상의 정책 대응 관련 7개 연구과제, 고령사회 정책 대응 관련 5개 연구과제

○ 사업과제(6개 과제)

- 인구변동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과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6개 사업과제 편성

4 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표 1-1〉 연구 영역별 2023년 추진 과제

구분	연구 영역	과제명
연구 과제	인구 현상 심층 분석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국내 인구가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출산과 사망에 대한 거시변수 영향 분석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 인구추계 모형 구축과 활용 방안
	저출산 현상의 정책 대응	가족과 출산조사 개편 방안 연구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이행기 청년 삶의 궤적에 관한 연구:이행 특성의 변화와 요인 분석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의 과제 난임기술 현황과 대응과제 : 생식세포 기증 기술을 중심으로
	고령 사회 정책 대응	베이비부머 생애전환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인구구조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사업 과제	-인구변동 및 정책 추진 모니터링 -연구 기반 조성	(사업)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발행 (사업)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사업)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고령사회 (사업)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 (사업)인구포럼 운영 (사업)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제2절 연구자문위원회 회의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2. 12. 28.(수) 10시 30분, 집현실
- 참석자: 총 11명
 - 자문위원: 이철희 교수(서울대학교), 최슬기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수정 교수(동아대학교)
 - 원내: 이소영 단장, 이윤경 연구위원, 김종훈 연구위원, 강지원 부연구위원, 최경덕 부연구위원, 오신휘 전문연구원, 최인선 연구원, 장성현 연구원

□ 주요 논의 결과

- 연구 방향 설정 및 과제 개발
 - 인구정책에 영향을 주는 다른 정책 영역의 변화를 고려한 과제 개발(예: 노동시장 개혁, 고용연장 등)
 - 사회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변화된 사회에서의 문제점과 특징, 전략에 대한 연구(예: 고령사회)
 - 정책 효과성 평가 및 정책 결과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필요
 - 이와 더불어 그동안 평가가 미흡했던 영역, 혹은 향후 평가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연구 수행 필요
 -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질문 제기와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 세부적으로는 개별 정책의 정체성 및 당위성 혼란, 하나의 패러다임에서의 정책 관점 부재

6 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연구 필요
- 구체적으로, 단기적 영향이나 현상 분석이 아닌 본격적인 중장기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임신/출산에 초점을 둔 나머지 부모 양육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임
- 돌봄제공자(비공식/공식) 실태 파악과 이들 입장에서의 연구 진행 필요
- 돌봄인력의 수요과 공급 등에 대한 심층적 연구 수행
- 그 밖에 정부부처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연구 수행

○ 인구정책기획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 인구 관련 데이터 생산의 지속과 신설, 고도화: 부가조사 실시, 행정데이터와의 연계, 패널 구축 등
- 생산된 조사자료를 활용한 컨퍼런스 및 학술대회 등 기획
- 인구변화와 불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데이터 생산 중요

○ 기타

- 새정부 들어 용어사용의 변화(재생산권 → 생식권, 가족 다양성 등 특정 용어 교육과정 삭제)에 대한 연구원 차원에서의 대응 고민

□ 세부 내용

○ 최슬기 위원(KDI 국제정책대학원)

- 여전히 외부(특히 정부부처)에서는 정책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정책(사업) 간 우선순위 파악 및 정책의 집중 추진 영역 판별에 대한 요구
- 정책을 집행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쪽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연구 개요
- 기존의 평가 연구들과는 다른 보다 심층적 접근 필요
- 코로나19에 대한 연구가 잘 발견되지 않음.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사회 모습과 인구 차원에서의 이슈와 연결된 연구 필요(예: 재택근무, 위케이션, 일가정양립의 변화 등)
- 단순 현상 기술이 아닌 필요하다면 제도 도입 제언, 개선사항 도출 등
- 기존의 코로나19 관련 연구(시급, 단기)와는 다른 접근 필요
- 사회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인구감소 등)에 따라 변화된 사회에서의 문제점과 특징, 이에 따른 전략에 관한 연구(예: 고령사회)
- 생산한 조사자료를 활용한 컨퍼런스 및 학술대회 등 기획
- 정책 효과성 평가에 있어 근본적인 지표(출산율, 출생아 수)는 지속 평가되어야 함
- 여성의 출산도구화 등의 논의 흐름으로 인한 정책을 판단하는 근본적 지표들이 전면에서 나가지 못한 한계(출산정책 평가)

○ 김수정 위원(동아대학교)

- 새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불명확한 상태로 패러다임 설정 필요
- 이는 세부 정책별로도 명확히 발견
- 부모급여(약 2조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재 및 아동수당과의 연계, 일반적 아동수당과 맥락이 다른 현재 아동수당 모습, 부

모급여 도입에 따른 아동수당의 모호성과 축소 등

- (현금성)영아기 집중 투자(이전 정부)가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유효한 논의의 틀인가?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실제 사회 투자인가? 영아기 집중 투자가 아동투자의 이론과 연결되는가? 등
- 정책 결과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 요구
- 아동수당의 용처 논란(적금 등 은행 이전), 수요자 및 공급자(정부)의 정책 인식에 대한 구체적 연구 필요
- 임신/출산에 초점을 둔 나머지 부모 양육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
- 양육비용, 양육시간, 양육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parenting/mothering의 부담(특히 청년층 등 과업 미이행 계층) 등
- 돌봄 제공자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관계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실태와 이들의 입장에서의 연구 진행 필요
-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등은 당사자 입장에서의 조사, 향후 일을 하면서 돌보는 것이 일상이 될 것을 고려할 때 돌봄자(공식/비공식)에 대한 본격적 실태 연구 및 조사 데이터 축적 등 필요
- 돌봄 인력의 부정합성, 부족 등에 대한 고민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연령제한 부재, 고연령층의 돌봄 지원, 저임금 문제, 외국인력 활용 문제 등
- 새정부 들어 용어사용의 변화(재생산권 → 생식권, 가족 다양성 등 특정 용어 교육과정 삭제)에 대한 연구원 차원에서의 대응 고민

- 보사연의 강점은 불평등에 대한 연구임. 인구변화와 불평등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데이터 생산이 중요

○ 이철희 위원(서울대학교)

- 인구정책기획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 관련 데이터 생산의 지속과 신설, 고도화 필요
- 주기적 조사 + 부가조사 실시
- 최근의 흐름은 자체 생산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정부의 행정데이터와의 연결임(예: 노동연, 사업체패널과 고용보험 연계). 건보나 통계청과의 연결을 고민해볼 필요
- 연구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는 패널 구축이 주효하기 때문에 인구패널 구축이 필요해 보임
- 최근, 통계청에서 5년 정도 데이터의 인구패널을 만들었으나, 변수 개수 등의 측면에서 활용도는 낮은 편
- 정책 평가와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
- 현재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 불분명한 상태로, 곧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 요구가 있을 것임
-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부모급여 등 그동안 평가가 미흡했던 영역 혹은 향후 평가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연구 진행
- 인구정책에 영향을 주는 다른 정책 영역의 변화를 고려한 과제 개발
-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노동시간)은 경제/산업 정책에서 주로 다루지지만, 일가정양립 등과도 직결되는 문제

- 고용연장 관련해서 이로 인한 다양한 계층 및 집단(청년, 대기업/중소기업, 공공/민간)이 빈곤 등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 이는 보사연만이 할 수 있는 역할
- 과거의 코로나19 연구는 단기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수준.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 코로나19의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본격적 연구 추진 필요
- 기존 연구들은 데이터 부족으로 현상 기술, 노동시장 효과나 아동의 교육 손실 정도 분석
- (돌봄) 노인인구의 규모를 넘어 그들의 가족구조, 건강상태, 서비스 수요의 변화를 포착하여 돌봄인력의 수요와 공급, 현재 돌봄인력(외국인력, 최저임금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 진단 필요
- 더 나아가 중고령자의 건강 및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에 따른 예측, 미래의 중고령자의 생산성 등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및 선제적 대응 등(총론 수준의 논의만 있는 상황)
- 그 밖에 정부부처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연구 수행
- 새정부의 정책 방향 수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생각지 못한 영향에 대한 제언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론, 가정, 이전 추계의 문제 진단 등
- 사회보장정보원, 건보공단, 통계청 등과 협약을 맺어 워크스태이션을 보사연 내 설치하는 것도 좋음(서울대 사례)

○ 원내 연구자

-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고령자를 위한 정책 연구 중심, 노인복지 차원을 넘는 접근 필요

- 예를 들어, 현재의 기초연금 형태가 인구변화와 정합성을 갖는가?
- 인구정책이 워낙 많은 영역을 망라하다보니 독자적 영역을 정립하기가 어려움
- 이러한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나, 이로 인해 정책이 들어가는 대상별 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효과성 평가 등은 인구정책 측면에서 진행되지 못함(인구와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처나 위원회에서 접근)
-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작은 사업 중심
- 인구로 묶되, 특수성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요구됨

제3절 인구정책기획단 정례회의

1. 제1차 인구정책기획단-원장실 정례회의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3. 1. 4.(수) 10시, 집현실(화상회의 병행)
- 참석자: (직함 생략) 이태수, 박종서, 이소영, 우해봉, 이윤경, 김종훈, 변수정, 이상림(온라인), 강지원, 김은정, 장인수, 조성호, 최경덕, 최선영, 이지혜

□ 주요 내용

- 1. 기존 인구 정책이나 연구의 한계, 2. 보사연의 인구 관련 대응이나 성과에 있어서의 한계, 3. 향후 인구 연구단의 연구 활동에 대해 논의

가. 인구정책기획단 단원 의견

□ 이윤경 연구위원

- 인구 분야 침체는 우리원, 복지부, 저고위 모두 마찬가지이며 목표 부재 때문임.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인구변화 속도 감속, 출산 증가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기존 우리원의 한계는 원내외 협업 부족, 장기적 연구 부족이며 향후 연구는 기획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현 정부의 노동, 교육, 연금개혁 세 가지 개혁에 대해 미래 인구변화 반영과 인구변화 감속을 위한 기제 포함에 대해 모니터링 필요
- 원내 타 영역을 끌어들이고 외부인력과 함께 논의구조, 연구 구조를 만드는 것 고민 필요

□ 조성호 부연구위원

- 국가 기조 파악 필요. 기존 저고위는 출산율, 기재부는 향후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지난달 저고위에서 출산율에 얽매이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혀 저고위도 대응으로 기조를 바꿨음.
- 지난 정권에서 여성중심 성평등 등 기조가 반영되면서 복지부에서 저고위, 여가부, 여정연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하며 우리 역할이 축소되었으나 센터 예산으로 연구를 꾸준히 해왔음. 이제는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되고 있고 인구 관련 과제 기획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우리 역할임.
- 그러나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발표에 대한 단기 대응도

필요. 최근 정부 발표 중 관련 토픽을 잡아 해야 하며, 우리는 외국인 유치 이민(유럽 경험 참고), 노인간병 전문인력 도입(일본 경험 참고), 고령자 계속고용(일본 경험 참고)에 대응 가능. 이에 대해 기존 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 이슈앤포커스, 수시나 연개금 과제 수행 등으로 대응 필요

□ 이상립 연구위원

- 정부는 이제 적응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함. 저고위 논의는 인구정책TF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기재부에서 작성된 것임. 기존에는 복지부가 저고위를 사실상 운영했는데 이제는 기재부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대체법안에 지방인구와 적응정책 두 개는 확실히 들어갈 예정임.
- 인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폭발하고 있으며, 기존 출산율 높이는 것과 다른 차원으로 가고 있음. 저출산 원인도 수도권 집중, 부동산 시장 동향 등 거시적, 심리,문화적 요인들도 진행되고 있음. 판이 바뀌고 넓어지고 있는데 주도 전략으로 갈지 쫓아가서 하던대로 하는 전략으로 갈지 내부 합의와 선택이 필요하며 각자 리스크가 있음.

□ 최경덕 부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적응에 초점 필요.
- 정책 수립이나 배정 시 효과성에 대한 평가 필요. 향후 추진할 인

구정책의 당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 원에서 수행해야 함.

□ 장인수 부연구위원

- 결과물 확산 방법 제고 필요(국토연, 노동연 등 사례를 참고). 인구정책기획단 차원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독자적인 정책자료, 발간물을 만들고 구축, 공유 필요.

□ 최선영 부연구위원

- 정부 방향에 대한 얘기들은 향후 연구자들에게 공개적이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연구주제 선정이나 연구 과제 이끌어갈 때도 관련됨.
- 저출산을 문제로 인식하고 속도 조절 방향에 대해 공감하지만 사회를 바꾸는 성격을 가지는 완화정책이어야 지지를 받고 방향을 만들 수 있음. 적응과 완화를 세분화해서 제3의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임.
- 예산 및 정책 효과성 관련해서는 수당정책, 육아휴직, 일가정양립 정책 등의 효과성을 인구단 차원에서 공유 필요.

□ 우해봉 연구위원

-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려면 논의의 초점이 잘 맞아야 하고 핵심 이슈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계속 다른 이야기를 띄우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음.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인구 관련 향후 연구에 대해서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지만 원내도 다 다름. 특히 인구단, 인구실은 인구라는 이름 하에 들어와 있지만 공통된 분모가 정말 적은 실이기 때문에 해법도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함.

□ 변수정 연구위원

- 저출산 대응 정책에 국한해 본다면 국가적이든 연구원이든 침체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기임. 고용 주거 교육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기존 출산, 보육, 돌봄, 일가정양립 같은 복지 지원 위주였고, 이제 남은 것은 구조변화 접근 필요. 이 문제는 우리 전문 영역을 벗어난 것이 대부분이라 어떤 연구원에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점에서 있음.
- 이런 때일수록 할 수 없는 것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기초를 더 튼튼히 하는 시간이 필요함. 과제 선정 시 정책에 대한 기여를 많이 기대하는데 지금은 포인트가 달라지는 시점이니 연구원 과제와 맞지 않아도 꼭 필요한 기초를 다지고 변화하는 것에 따라가는 연구 축적 필요.
- 연구 확산 관련해서는 가족과 출산 조사 홈페이지나 인구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족과 출산 조사 시계열 변화 등을 볼 수 있게 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관련 대표 지표(일가정양립지수, 여성고용률 등) 등을 볼 수 있게 모아서 제공 필요.

□ 김은정 부연구위원

- KDI의 경제전망 보고서와 같이 기획단이나 보사연도 인구전망보고서나 인구변화트렌드 키워드를 가진 보고서를 시각적, 구조적으로 지역별 주제별 등 모든 인구 관련 자료를 기존 자료라고 하더라도 구축해서 제공하면 좋겠음.
- 정부의 방향성은 한 방향으로 확실히 틀었다기보다는 그동안 다 있었던 것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완화 과제도 지속 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함.

□ 김종훈 연구위원

- 기존 인구정책이나 관련 연구 한계는 인구정책의 근본 목표와 방향점, 그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거나 불명확함. 인구정책 연구 고유의 것에 대해 인구라는 공통 분모를 씌울 수 있는 각론을 찾아야 함. 다른 한계는 기존 연구 성과 자료에 대한 재평가나 활용이 부재함. 양적으로, 방법적으로는 많이 재생산되고 있지만 비판적으로 비교, 평가 부족. 잘 활용되지 않음.
- 보사연 인구대응의 한계로는 자체 연구 기획, 정책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약했음. 인구학적 기초연구나 이론, 통계 실증분석 등 내외부 협업이 부족했음. 연구성과 축적 자료에 대한 재평가나 메타스터디 필요. 원내 생산 통계자료 활용 늘릴 필요. 기존 정책 평가 구체화 필요. 정책 평가를 기존 모니터링이나 제도 행정평가 수준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논의 필요. 예산이나 재정평가 등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 필요.

- 인구 고유의 독자적인 연구는 단기, 중기, 장기적 변화에 대한 시각 제시임. 인구변화가 일어나는데 따라서 단기적, 중기적으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적응력이나 변화가 가져오는 이득이나 손실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나 불평등이 제기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인구문제에 따라 시기적으로 균병력 감축, 군구조 축소 개편, 초중고 교원수급 재조정, 사학법인, 대학 구조조정, 주택수급 지역별 불균형, 공무원 수 수급 변동성, 공공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 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 세제개편, 사회갈등, 불평, 양극화 등에 대한 마찰 등이 인구적인 연구로 가능할 것임.
- 인구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찾아보면 인구변동에 대한 이론적 연구나 통계분석, 실증분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기획되어야 함. 혼인, 가족형성, 가족제도 등은 한번 과제화해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기획해야 함.

□ 강지원 연구위원

- 기존 인구정책이 인구규모나 인구구조변화나 인구이동 같은 근본적인 인구문제보다는 노동력부족이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에 근거해 사업을 발굴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던 것이 인구정책의 한계라고 생각함.
- 우리 원에서 그동안 인구추계나 인구구조, 인구이동과 인구소멸 같은 인구정책 기반이 되는 인구연구에 대한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지속될 필요가 있는 과제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음. 센터 예산의 일부는 인구 자체의 연구에 할당해야 하고 소규모의 실태조사보다는 인구패널과 같은 자료 생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 하나 기존연구의 한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간의

고유 영역이나 역할에 우리연구원이 너무 과다하게 구속되는데 범위를 넓혀야 함.

- 향후에는 1. 인구연구 자체에 대한 투자 필요. 인구규모, 구조, 이동 관련 기존 연구 중 계속 생산 가능한 통계를 식별하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구조 마련 필요. 2. 부처와 사업을 넘어 포괄적인 저출산 대응이나 고령화 대응에 대한 정책 아젠다 주도 필요. 개별 사업 기준 평가에서 벗어나 여러 사업을 동시에 고려한 평가 필요.

나. 원장실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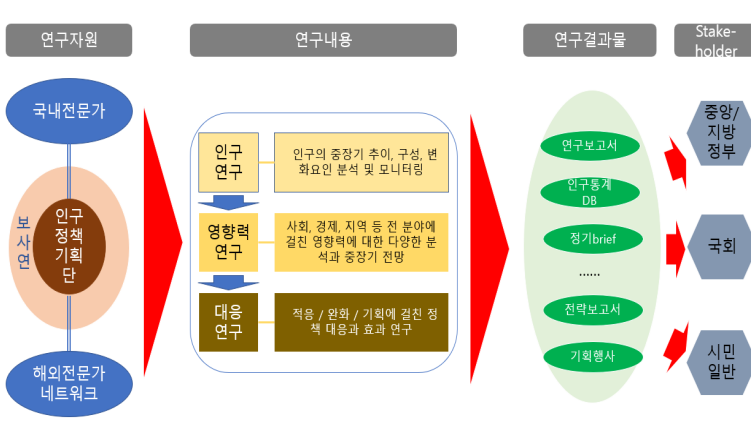
□ 단 설치의 배경

- 1970년 「국립 가족계획연구소」로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족계획연구에서 시작하여 인구문제 연구는 물론 건강, 가족 노인, 아동 등 인구연구와 연관된 많은 영역을 포괄하는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였음.
- 특히 2005.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고 기본계획이 매5년마다 수립되면서, 자체연구 및 수탁연구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연구기관으로 그 위상을 분명히 하였음.
-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본 연구원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연구본부,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등 다양한 명칭의 부서를 설치, 운영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인구정책연구실에서 인구 및 저출산, 고령화 연구를 담당하는 조직형태를 최근까지 운영하여 왔었음.

- 이런 가운데 인구 및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연구성과도 매우 독보적이어서 2023. 1. 초 현재 인구관련 총 547편, 저출산관련 총 622편 고령화관련 총 553편의 연구결과물이 생산되었으며, 이에 보사연은 가히 인구관련 연구기관으로서 국내외 어디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임.
- 그러나 우리원의 이러한 연구 성과 및 기여에도 불구하고 국가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고 있고, 급기야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에 직면하여 국가사회적인 큰 난제인 동시에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대두되었음.
- 따라서 우리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축소사회 도래,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환 등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응책 도출에 대해 더 실효적인 정책을 생성하고 국가사회적 차원의 문제해결력을 제고하도록 우리원의 자원과 연구력을 집중해야할 때임.
- 이에 우리원은 기존의 인구정책연구실을 과감히 해체하여 어느 한 실에서 인구관련 연구를 책임지고 실행한다는 통념을 깨고 인구 및 저출산·고령화 관련 연구와 대응은 전사적(全社的)으로 행한다는 전제 하에, 핵심적인 기획기능을 위주로 원장과 직접 소통하며 기동성있게 대응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산하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와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를 둬.

□ 단의 주요 역할

[그림 1-1] 우리원의 전사적 인구연구 수행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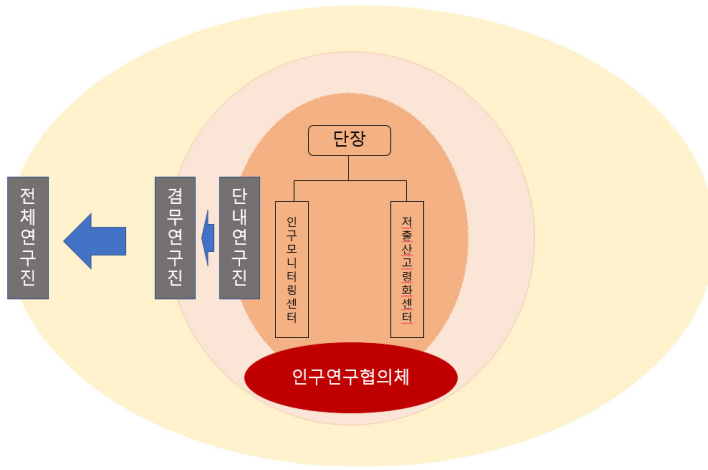


- 첫째, 인구 추이와 구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심도있는 분석
 - 주로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의 업무로서 현재의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과 향후 추이, 이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 이들로 인해 귀결되는 현재와 미래 영향력의 양상과 정도 등을 연구를 통해 밝힘
- 둘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연구 기획
 -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으로 다년 연구사업으로 진행되는 일반과제를 활용하여 인구 및 저출산·고령화를 둘러싼 정책 동향과 사회 이슈의 변화에 대응한 연구사업들을 기획하고 이의 실행을 주관
- 셋째, 대외적으로 발생하는 인구 및 저출산·고령화 정책관련 원에 대한 수요에 대응

- 국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기획재정부·복지부 등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의 지방정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타 연구기관 등등으로부터 다양하게 요구되는 인구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세미나, 정책지원 등에 부응하여 질서있게 수행되도록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단 내 및 타 실·단의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
- 넷째, 인구 및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어젠더 형성과 이슈화를 위해 원 주도의 각종 사업 또는 정책자료화 작업 등 수행
 - 인구 관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책추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어젠더 및 이슈화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 동향을 파악, 분석하고 우리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단기 정책자료 생산 등을 기획하여 실행
- 다섯째, 인구관련 기초자료, 대표적인 연구물 등의 집적 및 주기적인 발간
 - 자체적으로 생산 또는 타 연구기관이 생성한 인구관련 주요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주기적으로 발간(증장기적으로는 DB화)하고 원 내·외의 주요 연구물을 정리하여 최근의 인구관련 저작물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집 발간
- 여섯째, 국내외의 인구관련 주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 강화
 - 국내 인구학회를 포함하여 인구관련전문집단과의 유기적 관계 및 협력사업 등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인구연구의 글로벌화를 위해 국제적인 인구연구기관과의 실효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인력 운영 체계

[그림 1-2] 인구정책연구를 위한 인력 운영체계의 기본 구도



○ 인구정책연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원 전체의 연구진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위의 기본구도에서처럼 우선적으로는 인구정책기획단의 연구진, 겸무로 구성된 연구진, 그리고 인구연구협의체가 주도적으로 활약함. 그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인구정책기획단: 두 센터에 인구, 저출산 및 고령화 연구자 및 거시적 환경분석 관련된 연구자로 구성되어, 단 내에서 월 1회 및 수시 단 기획회의를 통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여 기초안이나 아이디어를 생성
- 인구정책기획단 겸무연구원: 인구, 저출산, 고령화 연구에 성과가 있는 원내 연구진 및 소득보장·청년·사회서비스·보건·사회보재정 등에서 이와 관련된 각 실의 대표연구진으로 구성.

이들은 기획이나 연구수행관련 필요시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 대상임. 직접 연구수행의 우선적 풀(pool)이 됨.

- 인구연구협의체: 단원과 겸무 연구원 중 각 영역(인구, 저출산, 고령화, 거시정책, 소득보장, 보건, 사회서비스, 청년, 사회보장재정 등)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하여 분기별 및 수시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사업과 연구기획을 행함.

□ 우선적 해결 현안

○ 인구관련 연구 재원의 확인

- 자체 일반과제 예산
- 연구회 협동과제 등 활용 예산
- 그 외 주요 기관의 활용 예산

○ 인력의 구성 및 역할 부여

- 이윤경 센터장 후임 및 단원의 추가 여부
- 단원들의 정기기획회의 운영 방법 및 각 단원의 역할 부여
- 겸무의 추가 여부(영역의 대표 연구자들 추가)

○ 협의체의 기능 명료화 및 구성 확정

- 단원과 겸무연구진 중 적정 인원으로 구성. 단장이 위원장, 간사 선정

○ 시급한 사안

- 2023년 일반과제의 사업성 과제 개발
- 2024년 일반과제 기획주제 발굴 및 비중 제시, 나아가 주요 지원사업 개발

2. 제2차 인구정책단-원장실 정례회의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3. 2. 14.(화) 10시, 세종실
- 참석자: (직함 생략) 이태수, 박종서, 이소영, 이윤경, 우해봉, 김종훈, 조성은, 강지원, 최경덕, 장인수, 변수정, 김세진, 김은정, 주보혜, 최선영, 조성호, 임지영

□ 주요 내용

- 1. 인구정책기획단 포지셔닝 리포트 발표와 논의, 2. 기존 연구사업 평가, 3. 3개 연도 연구과제 기획 논의

가. 인구정책기획단 포지셔닝 리포트

1) 우해봉 연구위원

□ 인구정책의 정체성

-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인구학적 변화를 초래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제도) 조성이나 이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사업)를 의미함(협의). 혹은 인구 변화와 사회 발전 간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 해석되기도 함(광의). 좁은 의미로 인구정책을 정의할 때는 ‘적극적으로’ 인구학적 문제(e.g., 저출산)를 해결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만, 넓은 의미로 정의할 때는 ‘소극적으로’ 인구학적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도 인구정책으로 이해함.

-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정의하든 저출산 현상에 직면한 선진국 인구정책은 ‘다양한’ 사회정책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음. → 다양한 정책 영역을 겨냥해야 하기에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적절한 수준의 관심과 재원이 투입되지 못할 위험성이 잠재하는 동시에 인구정책의 설계/집행/평가 틀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 저출산 상황에 직면한 선진국에서 인구정책이 대체로 사회정책을 통해 실행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반적인 복지정책과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음. 또한 스웨덴의 사례처럼 저출산 대응 정책은 성평등 정책과도 복잡하게 얽힘.
- 1994년 카이로 ICPD 이후 인구정책은 국제적으로 핵심 이슈의 지위를 상실했으며, 개별 국가가 직면한 인구학적 상황에 따라 파편화하는 모습을 보임. 과거의 고출산 상황과 비교할 때 이러한 인구정책 공백기(예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및 프랑스)에 (초)저출산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함.
- 이러한 관계로 현재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설계/집행/평가에 관한 인구학적 이론과 정책 역량이 충분히 정교화되지 못함.

□ 인구정책의 범주와 관련 영역

- 인구정책이 지향하는 인구학적인 변화는 인구변동 요인(출생, 사망, 이동)을 통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사망과 건강이 동일한 생물학적 과정에 기초하기에 사망은 인구정책이 아니라 ‘건강정책’의 일부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따라 인구 문제에 대

한 정책적 개입은 대체로 출생과 이동(이민)을 대상으로 하여 설계됨.

- 인구정책의 수단 혹은 기제는 1) 정보 확산/제공, 2) 법령/규제, 3) 조세(재정) 감면/지원, 4) 직접 투자의 형태를 취함.
 - 고출산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의 효용이 컸지만, 저출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과 직접 투자의 역할이 커짐.
→ 복지국가 축소기에 추진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이유가 되며, 특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완성 이전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이 더 어려운 상황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정책 목표와 방향

- 단기간에 저출산 대응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할 개연성은 당분간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인구 감소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그리고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직접' 겨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대외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하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은 크지 않은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최근까지 보사연 차원의 인구정책 목표나 방향에 관한 논의는 없었으며, 그간 인구정책에서 보사연의 역할도 일관되지 못했음 (e.g., 1~3차 기본계획 vs. 4차 기본계획).
 -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지향하는 방향 제시나 정책 설

계보다는 단기간(5년)의 정책 성과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 측면이 강함.

- 과거와 다른 인구학적 상황(저출산)에서 인구정책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연구원 차원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보사연(만)의 인구정책 목표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 보사연(만)의 인구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기 전에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인구정책기획단에서 인구정책의 목표/방향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인구 관련 정부 사업을 보사연이 주도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현재까지 인구정책기획단 내부(+겸무)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공유된 문제의식이 있는지는 불분명함.
- 인구 부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에서 연구원 내부의 공감대가 없는 한 현시점에서는 보사연만의 인구정책의 목표나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향후 10~20년을 대비해서, 내부 역량을 높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것으로 보임. → 이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으로 보사연의 인구정책 목표/방향 검토
 - 향후 10여 년 후부터 자연 감소의 폭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20여 년 후에는 총인구의 감소 폭이 가팔라진다는 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해 정부가 현재와 같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인구 관련 정부 사업에서 보사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

는 것도 인구 문제의 해결에 관한 역량 부족과 관련이 있음.

-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처럼 과거 보사연 주도로 이루어진 사업이 현시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배경에도 보사연의 역량 부족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음.

←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보사연의 인구 연구는 사실상 공백기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임.

- 한편, 최근 들어 (방법론적 발전에 힘입어) 전체 인구변동에 대한 함의를 살펴봄 없이 세부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아지는 경향임. 정책 영역에서도 인구 문제 해결에 대한 비전이나 함의에 대한 논의 없이 세부 정책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함.
- 세부적인 연구/사업을 넘어 인구변동/인구정책 전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를 연구자들이 설계하는 것도 역량 향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음.
-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포럼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의 '인구포럼'은 형식성이 너무 강한 관계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연구원 내부로 세부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해 주지 못하는 형식의 회의(국제회의 포함)는 외부자(발표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지만 연구원 내부의 역량 강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개연성이 높음.

2) 김종훈 연구위원

□ 인구정책의 정체성

○ ‘인구’의 다층적이고 이질적인 측면들 간의 ‘균형’ 정의·수립에서 인구정책 정체성의 단초를 모색

- (통사적으로 일반적, 관성적이었던) 국가적, 경제적, 외생적, 거시적 접근 방식들의 과잉을 완화 또는 합리화 (rationalization) “저출산에 대한 위기 의식이 (결혼-)출산-가족-양·보육 결정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어느 한쪽의 시각·관점에 치우쳐서는 그 분야의 (종합)정책에 매몰될 위험이 크다는 점 인식 “경제정책으로서의 인구정책, 사회정책의 일부로서의 인구정책, 보건복지정책으로 구현되는 인구정책이 아닌,..”
- “인구(정책) 고유의 무엇”의 부재란 근본 딜레마 극복은 어렵지 않을까..
- 별개로, 인구변동과 사회현상, 경제현상들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모든 사회·경제현상의 총합이 인구변동을 모두 포함·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인구변천이론, 진화론적 사회학, 생태경제학...)

○ 인구정책의 가치/필요성에 대한 근거 제시로부터 정체성의 요체를 구축

- 인구와 관련된 개인의 선택(결혼을 할지, 아이를 낳고 키울지, 가족을 어떻게 돌볼지)에 대한 국가·사회의 개입·간섭의 근거와 정당성을 명시
 - “인구 규모와 성장의 공공재 성격과 공공성”
 -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선택이 가지는 사회적, 인구적 가치”
 - “경제·사회 발전과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행복 간의 관계”

- 당위로서가 아니라 구현 가능성에 기반한 인구정책적 개입의 근거 탐색

- ‘인구’ 고유의 관점, 장기적 시계로부터의 사회 정책적 함의 제공
 - 인구변동의 장기적 방향과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전망 제시
 - 인구변동의 중단기적 이행, 전이, 심화/완화 과정에서의 마찰, 갈등 요소/가능성을 파악하여 정책적/비(非)정책적 해소/완화 방안 제시(방향 예측)

□ 인구정책의 범주와 관련 영역

- 공공정책의 대상으로서 ‘인구’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국가적 이슈
 - 사회나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의 숫자와 특성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인구’는 집단 공동체의 생존을 결정하는 척도이자 국가의 경제력, 국방력, 국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이해되어왔기 때문
 - (국가주의/민족주의 개념 이전까지를 아우른) 보다 근본적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체가 소속 구성원들 개개인을 어떻게/무엇으로 간주하는지를 투영
- 하지만 인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은 개개인의 생애를 통한 출생·이동·사망의 경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추적·파악함으로써 이해되는 것이므로 다층·다면·다학제적일 수밖에 없음.
 - 사회 공동체의 생산력과 경제규모의 성장·지속·쇠퇴의 관점(생산요소 또는 외생적 투입 관점)이 직관적이겠으나, 개인 수준의 생애 경험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결혼·가족·돌봄 등 사회 제도/관습이나 환경 여건으로서의 고용·주거·교

육 등을 '인구'의 기반 요인으로 함께 고려하는 관점(사회적, 내생적 관점)이 불가결하므로 정책의 주요 관점을 어디에 둘지는 다양한 선택 여지가 있음.

- 또한, 인구를 집단·계층 단위를 중심으로 다룰 것인지(거시적 관점) 아니면 구성원 개개인의 생애상 선택의 양상에 초점을 맞춰 볼 것인지(미시적 관점) 여부에 따라 (정책적)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음.

○ 어떤 관점을 취하든 정책 차원에서 1) 의도한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가능성/실효성)와 2) 정책-효과 간 얼마 동안의 시차를 고려해야 할지(視界)의 두 가지 물리적 조건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또는 사회적 합의)가 가장 불확실/불확정적인 영역이 '인구'라고 생각됨.

- 인구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개입에 대한 적극적 관점과 소극적 관점이 갈라지는 지점임.
- 인구변동에 대한 (소극적) 적응/완화 對 인구변동의 방향과 강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개입 간의 선택 내지 균형 문제의 본질이기도 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정책 목표와 방향(예시)

○ '인구'에 대한 기본 관점 수립

- 다층·다원적, 이질적 관점들 사이에서 기본 스탠스 제시(어떤 내용?)
- 상충되는 관점들 가운데 우선 순위, 주안점 논의(어떻게?)

○ 인구정책의 기본요소와 정책 목표/기조 제시

○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예상 제시(예)

- 저출산 추세와 인구구조 고령화 지속; 인구 감소로의 전환 본격화
- 인구변동의 영향이 (대상 인구집단, 지역, 규모, 지속성(視界) 별로) 개별화, 다양화, 이질화되는 경향 강화
- (그에 따라) 연령별, 성별, 계층별, 지역별로 인구변동에 대한 이해관계가 갈리고 인식과 가치평가가 상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임. 인구변동에 기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또는 사회 갈등 요소 부각
- 인구정책의 기초에 대해 적극적 인구대응 전략과 소극적 인구적응 대책 사이의 간극이 해결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와중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구적응 대책들*의 대두는 불가피

* (시기적 순서로) 군 병력 감축 및 군 구조 축소 개편, 초중등 교원 수급 재조정, 대학 구조 조정, 주택 수급 (지역별) 불균형 심화 완화, 공무원 수 수급 변동성 안정, 공공부채 증가세 관리, 사회보험 재정과 세제 개편

○ '인구' 관련 기초·학술 연구에 대한 원내 연구 프로그램 기획 + 국내외 연구네트워크 참여/주도

○ 연구 방향 및 주제(예)

○ 1. (단기) 인구정책 수요 파악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중단기 공공 정책 수요 및 정책 지형도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 방안 (3년-5년 -10년 별, 부문 별)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단기(3-5년) 사회정책/보건복지서비스 수 변동 예상

○ 2. (단기-중기) 인구모니터링 및 인구 관련 정책 평가

- 인구변동 추이 전망 업데이트와 저출산의 원인 분석
- (인구 관점에서의) 혼인-가족형성-가족제도 분석/전망/정책
-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재정 평가(예산, 재정 집행 및 환류 중심)

○ 3. (장기 지속) 장기 인구정책 기반 구축

- 인구(구조) 고령화 관련 2차 통계 생산·관리와 분석·해석
- 인구변동 추적·분석·해석에 필요한 분석적 모형 구축

3) 이상립 연구위원

□ 인구관련 정책 범위의 확대

- ※ 인구변동의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으로 인구 관련 정책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 저출산고령화 정책: 기존의 정책들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지만, 현세대 노인 복지문제는 차츰 고령화 문제보다는 노인복지로 인식되는 경향
- 저출산 문제는 청년 문제와 결합 - 지원정책을 위한 기존 청년지원 연구의 한계
- 인구변동의 파급효과: 정부 인수위 시기 제안된 적응정책 등 (특히 인구변동에 따른 향후 정책과제 및 신규 정책수요 등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요구)

- 인구변동과 연동성이 큰 주요 사회문제: 연금개혁, 정년연장 등
- 지방 인구위기 문제: 인구감소지역 대응기금, 국토균형발전 등과 지역 단위 인구정책(출산지원금 등)

□ 인구관련 새로운 연구 수요의 등장

- 위 언급된 사항들과 더불어 새로운 연구 동향이 등장
- 인구변동과 새로운 사회문제의 출현 (예: 인구변동과 교육, 인구 고령화와 재난, 해외 고령화와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 등) 다른 영역들과 결합하여야 하지만, 인구변동이라는 핵심 사항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
- 저출산의 원인 분석: 기존 정책대상 요인(주거, 소득, 자산, 교육 등)에 대한 통계적 특징을 넘어, 청년, 노동, 가족 등의 연구영역과 결합되면서 사회구조적 요인(수도권 집중, 산업구조 변화 등)과 심리적 요인(코호트 경험 등) 등이 결합되는 새로운 경향
- 인구담론의 구성: 기존 경제주의적 접근에 대한 회의와 페미니즘의 단선적 가치지향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판 (적응정책의 전환에서 필수적 요소)
- 지역인구변동의 구조적 요인들과 지역별 다양성: 전국 단위 획일적 일반화와 변인중심 접근에 대한 대안 요구

□ 인구정책기획단 대응에 대한 고찰 필요

- 지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정체성이 흩어지고 있으며, visibility 도 크게 위축 (인구정책 재구조화, 지난 정부 인구문제 담론, 4차

기본계획 작성, 새정부 인구정책 마련 등에서 보이지 않는 연속된 실기(失期))

- 기획은 주제 설정으로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며, 시의성과 맥락적 적절성 확보 방안,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향후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공유된 상태에서 가능할 것 (비전문가적 이해에 근거한 즉흥적 아이디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주제 설정, 타영역에서 이미 실행된 연구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선 안 될 것)
- 지금까지 기획된 과제(내외부 과제 포함)에 대한 내부 성원 간의 성과 공유와 평가가 필요 (외부에 예산을 지원한 성과가 무엇인가? / 내부의 연구는 어떤 가치를 평가받는가?)
- 과제 성과와 함께 연구자 역량 확보도 필요 (차별성과 경쟁력 있는 연구영역과 연구자)
- 단 차원의 기획 마련이, 성과와 의의가 확인된 연구자의 연구계획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

나. 인구정책기획단 연구사업 평가

□ 김종훈 연구위원

- 인구정책의 근본 목표와 지향점 부재 또는 불명
 - 인구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합의 부재
-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활용 부재
 - 축적된 연구 성과에 대한 비교/평가/활용 없이 양적 확대, 반복적 주제에 집중

- 정부 기본계획, 사업 예산 관련 수요에 대한 추종 위주의 소극적 대응
 - 인구 현황 파악, 단기 전망, 정책 현안 대응 등 최소한의 역할만

□ 강지원 연구위원

- 인구추계, 인구구조, 인구이동과 인구소멸 등 인구정책의 기반이 되는 ‘인구 연구’에 대한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인구 이슈에 대해 원내 전문가들이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운 구조임.
 - 2016년에 ‘인구추계방법론의 현황과 평가’, 2018년에 ‘인구 영향평가체계 구축과 운영’, 2020년에 ‘인구변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각 연구들이 후속 과제로 도출되어 실제 성과(예, 기타보고서로 인구변동모니터링북이나 후속과제로 부모급여의 인구영향평가 등)로 이뤄졌다면 좋았겠음. 이는 우리 연구원의 과제 선정 방식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됨.
 - 유사하게 2021년에 수행된 ‘인구조사데이터의 생산체계 개편 연구’도 연구자문회의에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과 생산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유니스의 GGS에 한국을 포함하는 방식이 가장 비용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실태조사를 활용한 분석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인구패널로의 전환은 중요하다고 생각함. 일반예산에 전체를 포함하기 어렵다면, 세션별로 시차를 두고 조사하는 방식 등을 검토 필요
 - 해외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공식적이고 정례적인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고, 과제별로 필요한 내용만 다루면

서 동시점에 발간된 연구보고서 내에서 충돌 발견(예, 최근 일본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사례). 또한 사업의 성과는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한 가용한 변수로 한정된 실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다수의 논문들이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예, 보육료지원사업이 모(母)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수의 외국 저널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장인수 부연구위원

-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일반사업 보고서 등 결과물 차별성 부각 필요
 - 선제적인 현안 분석, 정책(입안자) 수요, 전문성 있는 연구 내용 생산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개선
 - 인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인구 현상 해석의 전문성 제고와 연구 기반 구축 보다 내실화
 - 인구 동태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 지속 수행 및 관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의 독자성 구축과 수호
 - 현안과 쟁점을 반영한 정책 수요 충족, 효율적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 및 공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연구 성과의 대외적 홍보 수단 강화 필요: 반기 전문학술지(가령, 인구 포커스 리뷰 등) 발간 검토

□ 최경덕 부연구위원

- 향후 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② 고령자의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의 보강 제안

- 동 연구들을 수행함에 있어 질적 분석(FGI 등)과 함께 양적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의 논거를 충실히 보강할 수 있을 것임

□ 김세진 부연구위원

○ 2022년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사업의 원년으로 2022년 모니터링한 영역 외의 사업을 2023년도에 모니터링 하는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2022년 모니터링에서 연구과제로 진행되면서, 많은 시간 및 자원을 투입하였으나, 2023년은 사업성 과제로 진행될 예정이기에 담당 연구진들의 노고만큼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됨

○ 2022년 인구정책기획단 사업으로 참여했던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니터링’사업과 ‘지역 연구원 협동과제’가 함께 운영되면서, 지역 연구원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었음

- 향후, 인구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연구원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연구과제 기획(2024~2026년)

1)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 강지원 연구위원

○ 2024년 중점/기획 과제 제안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양육 시간과 시설 돌봄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부처·각 사업단위의 설계로 아동과 부모 중심의 포괄적인 접근성과 급여 수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음. 사업의 효과성 평가 역시 각 사업(예, 보육료지원)-특정 사업군(아동돌봄사업군)을 중심으로 이뤄져 가정양육과 대체관계에 있는 서비스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되지 못하였음.
- (가정양육)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영아수당(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가정 양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부모교육 등 지원
- (시간지원)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 등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 지원
- (시설지원)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방과후돌봄서비스 등 인적자원투자의 개념과 사회성 발달 등을 위해 제공하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서비스 지원
- 개별 부처,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도 필요하지만(예, 부모급여의 고용유지 효과), 이를 넘어 사업 간 ‘관계’에 주목한 연구가 필요. 이를 통해 육아휴직의 확대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회보장급여 간 관계(부모급여 중복 수혜, 시간제 보육 포함 등)와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에 대한 통합관리와 시설 접근성 제한 등에 대한 고려(예, 인구소멸지역) 등 정책의 누락·편중 검토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 3개 연도 개별 과제 제안

- 1) 2024년도

- (과제명) 아동 돌봄 종사자 인건비 기준 마련 연구
- (필요성)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다부처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부모 선택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현재 국공립유치원은 교육공무원 호봉을, 사립유치원은 교육공무원 호봉기준의 85% 수준을,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정액 인건비로 예산이 편성됨. 뿐만아니라, 2017년 이후 도입된 다수의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건비 기준도 사업별로 차이가 있음. 대부분 기관운영비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서비스 질 제고를 유인하는 효과가 미흡함.
- (내용) 유아교육(교육부) 및 보육서비스(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방과후돌봄서비스(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학교사회복지사(시도교육청) 등 아동기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돌봄 체계에서 일정 수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돌봄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제시함. 인건비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재정 소요액 총량을 추계하고, 재원분담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

- 2) 2025년도

- (과제명) 교육(education)과 돌봄(care), 교육적 돌봄(educational care)의 정책 적용
- (필요성) 최근 학교는 「교육기본법」상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확대하여 '교육적 돌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

리나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춘 돌봄은 숙제지도 및 학습 지원 등 ‘교육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다부처 유사중복 사업을 초래하는 ‘교육적 돌봄’에 대한 조각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상황임.

- (내용) 국내 전문가 인식조사 및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교육적 돌봄’의 범위와 주체, 학교와 마을의 역할 분담, 교육적 돌봄의 제공자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함. 이를 토대로 교육과 돌봄의 역할, 그 중간에 있는 교육적 돌봄의 대상선정기준과 급여방식, 전달체계, 재정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 3) 2026년도

- (과제명) 아동돌봄안전망 재원조달과 재정지원방식 재구조화
- (필요성)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일부의 재원이 단일화되었으나, 실제로는 유치원과 비교할 때 어린이집 지원의 재정지원방식이 사업별·항목별로 구분돼 매우 복잡한 구조임. 또한 시도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중앙부처+대응지방비), 교육청 특별시책과 시도 및 시군구 자체사업 등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에 투입되는 총 지출을 확인할 수 없음. 방과후돌봄서비스 역시 유사한 구조(시도교육재정교부금, 중앙부처, 대응지방비, 자체사업비 등)이며, 특히 초등돌봄교실(늘봄학교)의 시도교육재정교부금은 SOCX에서 누락됨.
- (내용)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까지 아동돌봄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제한 후에 각 사업의 재원과 비용을 추정하

고, 재원조달과 재정지원방식을 검토하고자 함. 이를 토대로 저출산대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돌봄으로 인한 부모의 실질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최경덕 부연구위원

○ 2024~2026년 중점/기획 과제 제안

- 고령자의 자살 관련 이슈(자살, 자살생각, 자살시도 등)를 중심으로 24~26년 3년간의 기획 과제 제안

○ 3개 연도 개별 과제 제안

- 1) 2024년도

- (과제명) 고령자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유발 요인 분석 및 자살예방사업 평가
- (필요성) 한국의 자살률은 타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며, 특히 고령자 자살률의 심각성이 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해당 문제는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령자의 자살에 관하여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 (내용) 고령자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자살 예방사업의 적절성 등을 실제 자살 유발 요인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파악

- 2) 2025년도

- (과제명) 자녀 수와 고령자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저출산의 향후 파급효과

- (필요성) 한국의 자살률은 타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며, 특히 고령자 자살률의 심각성이 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해당 문제는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령자의 자살에 관하여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 (내용) 고령자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자녀 수를 살펴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자살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
 - 덴마크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자살은 자녀 수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동일한 관계가 한국 고령자에게서도 발견된다면, 저출산 및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자 자살 문제가 향후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3) 2026년도
- (과제명) 건강행동과 고령자의 우울 및 자살
 - (필요성) 한국의 자살률은 타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며, 특히 고령자 자살률의 심각성이 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해당 문제는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령자의 자살에 관하여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 (내용) 건강행동(health behavior; 운동, 음주, 흡연 등)이 고령자의 우울감,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건강행동과 고령자의 우울감, 자살생각, 자살시도 간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된다면, 이를 근거로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가능

□ 변수정 연구위원

○ 3개 연도 개별 과제 제안

- 1) 2024년도

- (과제명) 시민연대 관계 특성과 정책적 함의
- (필요성) 가족 실천 변화로 가족 형성의 자율성 증가와 구성의 다양성 경향이 나타나지만, 혼인 및 혈연 관계를 벗어난 관계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별을 경험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 (내용) 혼인 및 혈연 관계 이외에 돌봄 및 생활 공유하는 시민 간의 다양한 결합을 이해하고 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 및 개선 욕구 파악. 실제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 2) 2025년도

- (과제명) 한부모가족 아동의 성장 및 가족 경험과 정책과제
- (필요성) 한부모가족 연구는 부모의 육아 어려움 해소에 집중되어 있어 아동이 가족 특수성으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잘 드러나 있지 않음. 그러나 한부모가족의 증가로 한부모가족에서 성장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경험이 중요하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적 발전이 필요함
- (내용) 한부모가족 지원은 주로 양육자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자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 있음. 부모를 중심에 둔 접근에서 벗어나 아동의 시각에서 가

족 경험을 이해하고자 함.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의 아동으로 성장하면서 가족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험, 가족 인식 등을 파악하여 기존 양육 중심 지원에서 한 발 나아가 아동 개인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방법을 당사자의 시각을 통해 모색하고자 함

- 3) 2026년도

- (과제명) 다문화가족 아동의 성장 및 가족 경험과 정책과제
- (필요성) 다문화가족 아동은 그 수가 증가하고 한국 시민으로 성장하지만, 가족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정 집단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함. 이민 국가가 아닌 한국은 이주여성에 대한 정착과 양육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면서 다문화가족이 수혜의 대상으로 더욱 자리잡게 됨. 따라서 다른 가족과 차별되는 가족으로 여겨지는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의 경험은 한국의 정책 발전에 매우 중요함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
- (내용) 아동은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자라는데도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수한 집단으로 구분되는 환경에서 자라난 아동의 성장 과정 경험 및 가족 경험을 이해하고자 함. 교육 환경에서의 경험은 물론이고 최근 성인기로 이행하는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학령기를 벗어난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험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오히려 차별을 경험하게 하는 지원 등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이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발전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김은정 부연구위원

○ 3개 연도 개별 과제 제안

- 1) 2024년도

- (과제명) 아동기 현금지원 현황과 아동(돌봄)지원 정책 개선 방안 연구
- (필요성) 2023년은 부모급여가 본격 도입되어 영아기 현금 지원에 큰 변화를 가져옴. 또한 '23~'24에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교육부·교육청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와 특별회계 신설을 계획하는 등 영유아기 돌봄서비스 공급환경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영유아기 돌봄서비스 이용 및 공급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 이에 따라 영유아기 현금지원과 서비스이용 현황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아동(돌봄)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영유아기 연령별 현금지원 및 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현금지원(부모급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변화 분석,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서비스 공급환경 분석, 해외사례검토(현금-서비스 지원 규모 및 관계, 지원 유형 등), 수요자 조사(현금지원유형별 활용과 인식, 현금지원과 서비스이용의 대체성 등),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 개선방안 도출

- 2) 2025년도

- (과제명) 부모급여 확대가 출산과 육아휴직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필요성) 2023년 부모급여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2024년 급여액이 만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예정

임. 부모급여는 보편급여로 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고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육아휴직기간에 추가소득을 제공함에 따라 육아휴직제도 이용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부모급여가 본격 확대시행됨에 따라 해당 급여가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사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연령별 부모급여 수급 및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부모급여 수급과 육아휴직제도 활용의 관계 분석, 부모급여 수급과 어린이집 이용자 특성분석, 부모급여와 추가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모급여가 출산-서비스이용-육아휴직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관련 정책 개선방안 도출

- 3) 2026년도

- (과제명)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활용변화
- (필요성)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더라도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활용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해당 제도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내용)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에 따른 적용자 확대현황, 고용보험적용확대에 따른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체계 검토, 제도확대에 따른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활용 변화 및 사각지대 현황 분석, 관련 정책 개선방안 도출

□ 최선영 부연구위원

○ 3개 연도 개별 과제 제안

- 1) 2024년도

- (과제명) 유자녀 여성의 근로형태에 대한 연구
- (필요성) 유자녀여성의 경활율(또는 고용율)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일을 지속하는 여성들의 근로형태에 대한 관심은 부족함.
- (내용)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제)의 도입 이후, 자녀가 있는 여성이 고용을 지속할 때,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배치, 작업장의 위치 등 근로형태 변화가 있는가를 연구함. 일생활 균형 및 시간주권의 관점에서 유자녀 여성의 근로형태 현황 및 변화에 대해 분석함.

- 2) 2025년도

- (과제명) 한국은 왜 비혼출산율이 낮은가?
- (필요성) 출산율에 대한 높은 관심과 달리, 출산형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은 거의 대부분 혼인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동안 주거형태(1인 가구 증가), 혼인상태(비혼, 만혼의 증가)에서의 급격한 변화와 비교하여, 비혼출산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음.
- (내용) 이 연구는 ‘출산제도’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의 출산제도가 가족이나 커플이 아닌 여성 개인의 출산으로서 비혼출산과 충돌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은 1) 국제적 맥락에서 한국 출산형태의 특성(출산연령의 분포 및

혼인상태 등 인구학적 검토), 2) 출산제도의 이론화: 법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검토. 3) 해외 사례 검토, 4) 변화의 전망 등임.

□ 김세진 부연구위원

○ 3개 연도 개별 과제 제안

- 1) 2024년도

- (과제명) 중장년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연구
- (필요성) 초고령사회에서 중장년은 주요 인적자원이나,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일자리와 고독사에 치중되어있으며, 이들의 삶의 모습과 욕구에 대한 정기적 조사는 부재함.
- 우리원에서 2019년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될 필요 있음
- (내용) 중장년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2) 2025년도

- (과제명) 초고령사회 대응 중장년 지원 정책 확대 방안 연구
- (필요성) 기존 중장년 지원 정책은 일자리(고용노동부)와 고독사(보건복지부) 정책에 치중되어있으며, 이들의 삶의 질을 위한 전체적 관점에서의 지원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부재함.
- 또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단절적 정책운영으로 중앙부처 내 이들의 정책을 전담하는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부재하는 등

전달체제도 구축도 미흡한 상황임.

- 전체적 관점에서 신중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앙차원에서의 중장기적 정책 마련 필요
- (내용) 2024년도 진행된 생활 실태 조사 및 복지욕구 연구를 활용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의 정책연구로 진행.
- 중장년 지원정책 및 전달체계 방안까지 제시

- 3) 2026년도

- (과제명) 비공식 노인돌봄 실태와 돌봄체계 개편 방안
- (필요성)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공식적 돌봄제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의 돌봄부담은 높은 상황이며, 이는 노인의 지역 내 계속 거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함.
-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 및 치매정책의 제도적 발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지속적 진행 등 다양한 돌봄정책의 확대된 상황에서의 비공식 노인돌봄 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돌봄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내용) 비공식 노인돌봄 제공자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제시

□ 주보혜 부연구위원

- 2024년 중점/기획 과제 제안

- (과제명) 초고령사회 노인 대안적 주거모델 구상
- (필요성) 현재 일반 거주 형태와 시설거주로 이원화되어 있는 노인 주거형태는 다양한 거주 관련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

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양산하여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짐. 노인의 주거선택권 확보와 주거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적, 실험적 시도가 주거영역에서 확산될 필요.

- 대안적 주거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화되는 노인의 특성과 욕구 및 생활사정에 근거한 주거모델을 탐색하고 구상하는 기초 연구가 요구됨.
- (내용) 국내외 대안적 주거모델 및 실증 사례 검토 및 설립·운영 주체·제공 서비스 영역 검토

○ 3개 연도 개별 과제 제안

- 1) 2025년도

- (과제명) 초고령사회 노인 대안적 주거모델 개발: 공동체 주거 모델
- (필요성) 1인노인가구 비율은 계속된 증가 추세에 있고, 장기적으로도 큰 폭으로 늘어날 예정임. 일상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고립과 소외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주거모델에서 구상될 필요.
- 공동체주거모델은 개인별 독립된 공간을 보장하면서도 소통과 커뮤니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거유형으로, 친밀감에 기반한 정서적 기능과 상호 생활지원을 기대할 수 있음.
- (내용) 공동체주거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공동체 주거모델 및 실증 사례 검토(청년대상 포함). 확산 가능성 논의

- 2) 2026년도

- (과제명) 초고령사회 노인 대안적 주거모델 개발: 돌봄주거 모델
- (필요성) 노인인구의 양적증가와 다양화, 또한 노인기의 연장으로 노인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돌봄의 형태 또한 다양화되고 있음. 돌봄 및 서비스와 주거모델은 서비스 제공주체, 운영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될 수 있으므로, 모델 구상 차원에서 여러 형태를 조망하고 국내정책 환경에 적합한 대안적 돌봄주거 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 논의가 요구됨.
- (내용) 돌봄주거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실증 사례 검토 및 확산 가능성 논의

2)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 우해봉 연구위원

○ 3개 연도 개별 과제 제안

- 1) 2024년도

- (과제명) 인구와 기후변화: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
- (필요성) 인구 고령화와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현상인 동시에 밀접히 연관된 이슈들이지만, 국내에서는 최근까지 인구와 기후변화를 둘러싼 쟁점과 대응 과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음.
- (내용) 인구와 기후변화의 세계적 동향과 양상을 분석함. 인구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의 작동 기제와 사례를 살펴봄. 온실가스 감축(완화) 측면에서 인구변동(인구 고령화, 인구(전국/지역) 감소, 가구 증감, 인구이동 등)의 영향에 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함.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분야별 위험 요인과 취약집단을 살펴보고 대응 과제를 논의함(적응).

- 2) 2025년도

- (과제명) 코로나19 팬데믹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 분석과 시사점
- (필요성) 2020년부터 진행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료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인구통계 자료가 정비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짐.
- (내용) 코로나19의 파급 효과에 관한 기존 국내 연구들은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초적인(조출생률/조사망률 등) 분석을 진행한 관계로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020~2023년에 걸친 인구통계 자료의 구축이 2025년경에는 완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과거 4년간에 걸친 코로나19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시화, 인구이동, 인구 고령화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코로나19 같은 신종 질환(예,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이되는 인수공통질환(zoonotic disease))의 등장과 전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미래에 출현 가능한 팬데믹의 위험을

평가하고 방지/완화하는 측면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3) 2026년도

- (과제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년의 평가와 정책 방향
- (필요성) 2006년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20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그 공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함.
- (내용) 제1차~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그 공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함. 1994년 카이로 ICPD 후 30년 동안의 국제인구정책의 동향과 특징을 분석하고, 20년 이상 지속되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증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김종훈 연구위원

○ 2024년 중점/기획 과제 제안

-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관점, 기조 수립을 위한 연구
 - 인구정책의 기조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해의 조정
 - 적극적 인구대응 전략과 소극적 인구적응 대책 사이의 간극 논의
-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재정)평가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단기적 정책 대응 로드맵: 공공부문 중심
 - (향후 5년/10년/15년 이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공공부문의 단기적 조정 방향 전망

(군 병력 감축 및 군 구조 개편, 행정 구역/선거구 조정, 초·중등 교원 수급 조정, 대학 구조조정, 주택 수급 불균형, 사회보험 재정 및 세제 개편 수요, 공공부채 및 채무 변동과 관리)

- 시급성(시기적 순서), 대응 필요성, 정책 실효성에 따른 우선 순위 도출

○ 3개 연도 개별 과제 제안

- 1) 2024년도

- (과제명) 인구변동의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의 다양성/이질성
- (필요성) 인구변동의 심화에 따른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이 개인, 개별 집단, 사회 계층별로 다양화, 이질화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임. 그에 따라 인구변동에 대한 이해관계가 (연령별, 성별, 지역별,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갈리고 인식과 가치평가가 상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임. 인구변동에 기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양극화 요소의 부각
- (내용) 1) 인구변동의 영향에 있어 계층별 차이와 2) 그에 대한 가치평가,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계층별 이질성, 3) 그로부터 비롯되는 사회경제적 갈등 요소와 정책적 함의

- 2) 2025년도

- (과제명) 저출산 추이 전망 업데이트 및 심층 분석
가족제도와 인구: 인구적 관점에서의 가족제도 변화 분석, 전망

- 3) 2026년도

- (과제명) [다년 연구] 인구 관련 2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
[다년 연구] 인구변동 분석 이론 모형 구축

□ 장인수 부연구위원

○ 2024년 중점/기획 과제 제안

- 인구 변동과 사회 양극화 심층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 지역 간, 세대 간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양상과 미/거시적 인구 행동 특성에 대한 심층 분석

○ 3개 연도 개별 과제 제안

- 1) 2024년도
 - (과제명) 세대 양극화와 미시적 출산 행위 특성 간 연관성 분석
 - (필요성) 저출산 양상 진단 및 해석, 향후 정책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미(거)시적 층위에서의 심층 분석 필요
 - (내용) 세대 간 양극화 특성이 출산 의도,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현재의 초저출산 양상이 자녀 돌봄, 가사노동 등의 개념과 결부된 세대 간 양극화 심화 특성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대안 도출
- 2) 2025년도
 - (과제명) 지역 인구 재성장 사례 고찰과 법, 제도적 개선 방향 모색
 - (필요성) 국가적 당면과제 중 하나인 지역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한 정책 방향 모색 필요, 특히 단편적 대응이 아닌 중앙-지방 및 유기적 협력 체계, 범부처 간 협력 체계에 대한 실질적 구축 관련 법,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내용) 지역 인구 재성장(population regrowth, regional

regrowth) 국외 사례를 고찰하고, 타산지석과 반면교사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법, 제도 중심의 개선 방향 도출

- 3) 2026년도

- (과제명) 지역 인구 감소 시대의 지역 적정 인구 규모에 대한 탐색과 합의
- (필요성)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적정 인구 규모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필요
- (내용) 지역 적정 인구 규모 관련 이론적 검토와 적용 가능성, 중앙-지방 간 유기적 재정 관계, 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적정 인구 규모 탐색 및 제시

□ 조성호 부연구위원

○ 2024년 중점/기획 과제 제안

- 남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 및 제도 사용과 정책 대응

- 최근 성평등 및 육아에서 남성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 및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이 강조되고 있으나, 남성은 장시간 노동체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제도 사용은 제한적임.
- 남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시간 사용),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실태 및 제도 사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여 남성의 장시간 노동 완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3개 연도 개별 과제 제안

- 1) 2024년도

- (과제명) 지역의 인구감소 관련 지표 및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 (필요성)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별로 차등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및 기금 선정 등 기준의 모호성과 한정적인 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내용) 기존의 인구감소 관련 지표(지방소멸지수, 인구감소지역)의 기준을 검토하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표 및 정책의 개선 방안 제시

- 2) 2025년도

- (과제명) 미혼 인구의 결혼·출산 가치관 및 특성에 관한 시계열 분석
- (필요성)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속적인 미혼 인구의 증가는 출산율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내용) 미혼 인구의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 및 특성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제시

- 3) 2026년도

- (과제명)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의 부양 부담과 사회적 부담 강화 방안 연구
- (필요성)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자녀 양육비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및 세대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남.

- (내용) 자녀의 연령 및 세대별(영유아, 초중고, 대학 및 성인 등) 양육비 부담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양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제시

3. 제1차 인구정책기획단 기획 모임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3. 5. 3.(수) 15시, 여민실
- 참석자: (직함 생략) 이태수, 박종서, 이소영, 이상림, 황남희, 임지영

□ 주요 내용

- 1. 인구정책 관련 정부 동향, 2. 저출산고령사회 및 인구에 대한 사회 동향, 3. 인구정책기획단 활동 현황 등 논의

□ 세부 내용

1. 인구정책 관련 정부 동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기본계획 재구조화 과제 논의 : 저고위, 연구회와 회의 두 차례 진행. 5월 8일 연구회에서 회의 예정
 - 연구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NRC 인구정책연구단 구성(안)은 연구회가 제시하는 회의체.

저고위 상임위원장의 관심이 있어 참석. 다음 회의 때 의제개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각 주제별 업무 분담할 것.

-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야 할 것. 구성안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됨.

저고위 과제로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과제도 계획 중.

- 관련도 분석 연구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해서 하고 있는 과제

○ 보건복지부

- 인구학회 쪽 사람들에게 건보공단 DB 분석 의뢰한 것으로 이야기들은 내용이 있음. 이것은 작년에 현안 작업한 것과 유사한 내용일 수 있음.

- 노후준비 쪽도 보사연과 진행하려고 하다가 다른 쪽으로 연구가 갔던 부분이 있었음. 보사연 쪽과 진행하지 않는 주제들이 많아지고 있어 보사연 인구단의 위상이 애매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함.

○ 기획재정부

- 기재부의 생각과 정책 방향을 유념해서 파악

○ 기타

- 국회 특위(인구위기대응)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음.

2. 저출산고령사회 및 인구에 대한 사회 동향

○ 국회

- 국회-CBS 국회 인구포럼 개최(정의로운 돌봄복지국가)

- 국회 예정처, 미래연 등의 국가아젠더 포럼 진행 예정
- 국회 쪽과 새로운 길을 발굴해야 하는지?
 -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모양. 특위가 구성되면서 좀 구체화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인구정책기본법 상정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 내실과 무관하게 국회와의 연결이 있었으면 함. 연구원과 국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언론

- 국민일보 등 저출산 특집 기사
- 헤럴드경제 등 특집 기사 준비 : 공동취재 요청
지면에 한 부분을 보사연이 작업할 수 있도록 협의 필요
- 언론사의 특집기사, 프로그램은 8개 정도. 서울신문 6. 15. 큰 행사. 후원 등에 보사연 넣는 것으로. 언론사는 영양가 있는 것들을 위주로 했으면 함.

- 따로 움직이던 부처, 언론 등이 함께 모이는 경향을 보임. 복지부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변화가 있음. 용산-저고위-복지부가 각기 방향이 달라 서로의 움직임이 다르게 보이고 있음. 저고위는 행사 집중. 저고위와 복지부 사이에서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음.

3. 인구기획단의 활동 현황

○ 수탁 현황

- 과제를 다른 실로 넘기는 연구는 아직 없음. 고령 쪽에는 관련

주제는 있을 것.

- 핵심 주제를 해당 실이 아닌 타 실의 박사가 수행할 경우 해당 센터장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진으로 수행

○ 대외 현황 파악

- 홍보팀의 검색 기능. 인구 관련한 내용도 검색을 해서 공유하는 방안도 고민 필요.

4. 제2차 인구정책기획단 기획 모임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3. 5. 17.(수) 15시, 여민실
- 참석자: 이태수, 박종서, 이소영, 이상림, 황남희, 임지영

□ 주요 내용

- 1. 인구정책 관련 정부 동향, 2. 저출산고령사회 및 인구에 대한 기획 과제, 3. 외부 기관 및 이슈 대응 등 논의

□ 세부 내용

1. 인구정책 관련 정부 동향

- 백세사회정책기획단(보건복지부)
 - 조직의 구성과 운영
 - 형식적으로는 3.23. 저출산 대통령 발표에 고령화 부분이 없다고 해서 후속조치 차원에서 나옴. 하나의 조직으로 봐

야. 구성은 저고위 밑에 있음.

작업반 4개는 노인복지, 축소사회대응반은 적응전략 내용인데, 기재부 인구경제과장이 한 이야기인데 논의가 진행 안된 것으로 보임. 작업반 조정은 저고위 안에서 될 듯.

회의는 월별 진행/ 6월쯤 발표하려고 함.

기본계획 수정작업에 연관될 수 있으며, 보사연이 사무국 역할 수행할지도.

- 재구조화 과제와의 연관성

-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없으나, 보사연 연구자가 각 작업반별 전문가로 참여하고, 재구조화 과제와 연결되어 내용이 추후 정리될 수 있음
- 재구조화 쪽의 고령 파트에서 작업반 사무국을 맡긴다는 방식으로 자료가 구성된 것

- 보사연의 위상, 역할과 업무 조정

- 계약 전 마지막 회의 진행됨. 저고위에서는 백세사회정책기획단, 청조위의 논의를 받아 정리하겠다는 입장임. 저출산도 청년 쪽은 직접적으로 연구하지 말고 결과 받으면 참고해서 작업했으면 함.

재구조화 과제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점을 참고해야 할 것.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 있음.

- 기획단 사무국 역할이어서 저고위 사무국과 다름. 재구조화 연구와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의 업무를 나눠서 개별 과제로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함. 지금은 저고위와 복지부의 업무 분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음

- 이전에 건보통합추진단을 생각해보면 보사연이 추진단을 운영해주는 역할을 맡았음. 업무의 중심을 보사연이 쥐게 됨. 보사연에 사무국을 두어 회의실 두고 운영비를 받는 형식으로 하면 보사연의 위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함. 원장 혹은 부원장이 들어가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방안도 모색 필요. 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도록 위상을 높이는 방안 필요

2. 저출산고령사회 및 인구에 대한 기획 과제

○ 인구 변화와 재정추계 협동과제

- (연구책임) 같이 연구 수행하면서 연책 역할을 할 분이 필요. 단에서 검토해주셨으면 함. 연구회에서는 6월 중에는 계약 진행했으면 한다고 함. 5월에 연책 확정하고 6월 계약, 연구 진행하는 것으로. 외부 연구기관도 찾는 중. 연책 섭외 / 연구진 참여 검토 / 협동연구기관 추천 등 요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기획

- 노동연 중심 협동연구 기획 논의 진행중.
- 기관별로 1~2개 제안/ 큰 과제와 작은 과제 나눠서 제안. 큰 과제는 2~3년, 작은 과제는 1년 단위
- 과제 기획
 - 인구연구단이 발족 예정. 인구연구단에도 과제 생성되어야. 외국인대책으로 총리실이 주문한 내용을 인구 관련 대형과

제로 외국인대책을 노동연과 논의해서 보사연 주관으로 하나 진행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구상할 지에 대해서는 초안 작성된 상황. 만약 노동연이 외국인대책을 노동연이 가져가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막을 수는 없는 상황. 그렇다면 우리는 외국인을 빼고 인구연구단을 내세워서 이 단으로 할 수 있는 과제 제안 필요.

외국인대책까지 포함해서 3억 정도로 제안하는 것으로. 세 분이 논의해서 수정 보완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 외국인을 빼야 한다면 그 쪽에는 참여기관으로 들어가고 다른 인구문제 쪽으로 다른 과제 제안 필요

제안서를 5월 30일까지 작업해야 함. 인구단 내에서 외국인 포함한 제안 내용을 1페이지로 작업요청. 주제가 확정되면 주제별 연차는 5월 30일까지 3페이지가량의 제안서 작성 필요. 그 후 논의 거쳐 최종 확정되면 6월에 계약

3. 외부 기관 및 이슈 대응

○ 인구포럼

- 국회와 함께 진행 : 아동수당. 학회 함께 진행 / 6월 30일 행사. 7월 30일, 8월 30일

○ 한중일 인구포럼

- 국장급회의로, 2번에 걸쳐 한국에서 할 때 수행.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진행하는데, 수탁과제 진행해달라는 이야기 있었음.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이야기. 5천만 원. 컨벤션 업체와 함께 해야 해서 이야기하고 있음.

○ 중앙일보 양육비 리포트

- 우리나라가 양육비 비싼 것으로 1등으로 나왔으나, 2012년 출산력조사 통해 나왔고, 국가별 비교연도도 달라서 신뢰성 떨어짐

○ 헤럴드경제

- 독일 출장 관련 논의 구체화 중임.

제4절 인구정책기획단 워크숍

1. 상반기 인구정책기획단 워크숍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3. 4. 13.(목), 충남 서천군
- 참석자: (직함 생략) 이소영, 이상림, 황남희, 최경덕, 오신휘, 이지혜, 임지영, 김보름, 임준경, 최인선

□ 주요 내용

- 인구소멸지역 담당자 간담회 및 향후 인구정책기획단 과제 논의

□ 세부 내용

1. 인구소멸지역 담당자 간담회

- 서천군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과 간담회 진행

- 지역 내 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과 인구소멸지역에서 제외되기 위한 경험 공유
- 정책에 대한 의견 논의

2. 향후 인구정책기획단 과제 논의

- 2023년 수행 출연금 과제 진행 상황 논의
 - 연개금, 수시 등 추가 개발 필요 과제 논의
- 2024년 과제 개발 논의

2. 하반기 인구정책기획단 워크숍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3. 11. 10.(금), 충남 홍성
- 참석자: (직함 생략) 이소영, 강지원, 이상림, 이지혜, 임지영, 임준경, 최인선

□ 주요 내용

- 인구소멸지역 현지조사 및 향후 2024년 인구정책기획단 과제 논의

□ 세부 내용

1. 인구소멸지역 현지조사

- 충청남도 홍성 남당리 현지 실사

2. 향후 2024년 인구정책기획단 과제 논의

-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사업 내 과제 세부 논의
- 추가 필요 기획 과제 논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사업 과제 계획

제1절 개요

제2절 연구과제별 계획



제 2 장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사업 과제 계획

제1절 개요

□ 2023년 세부 과제 편성 개요

○ 총 18개의 연구과제와 6개의 사업으로 편성됨.

○ 연구과제는 총 3개의 분야로 구성됨. 인구 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저출산 현상에의 정책 대응, 고령사회 정책 대응 분야임.

- 인구 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영역에는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출산과 사망에 대한 거시변수 영향 분석,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 인구추계 모형 구축과 활용 방안 등의 6개 과제가 수행됨.

- 저출산 현상에의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총 7개의 과제가 수행됨. 과제의 목록은 다음과 같음.

- 가족과 출산조사 개편 방안 연구,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이행기 청년 삶의 궤적에 관한 연구:이행 특성의 변화와 요인 분석,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의 과제, 난임시술 현황과 대응과제 : 생식세포 기증 기술을 중심으로

- 고령사회 정책 대응 분야에서는 5개의 과제가 수행됨.

- 베이비부머 생애전환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인구구조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표 2-1〉 연구 영역별 2023년 추진 과제

구분	연구 영역	과제명
연구 과제	인구 현상 심층 분석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국내 인구가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출산과 사망에 대한 거시변수 영향 분석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 인구추계 모형 구축과 활용 방안
	저출산 현상의 정책 대응	가족과 출산조사 개편 방안 연구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이행기 청년 삶의 궤적에 관한 연구:이행 특성의 변화와 요인 분석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의 과제 난임기술 현황과 대응과제 : 생식세포 기증 기술을 중심으로
	고령 사회 정책 대응	베이비부머 생애전환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인구구조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사업 과제	-인구변동 및 정책 추진 모니터링 -연구 기반 조성	(사업)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발행 (사업)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사업)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고령사회 (사업)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 (사업)인구포럼 운영 (사업)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 사업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협의체 운영에 대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발행, 인구포럼 운

영, 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과제로 총 6개의 세부 사업이 진행됨.

제2절 연구과제별 계획

□ 연구과제별 세부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사업 내 세부과제의 착수워크숍을 개최하며 발표하였고, 1년간의 연구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였음.

□ 착수워크숍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3. 2. 24.(금), 27.(월), 세종실
- 착수워크숍 세부 일정과 자문위원

〈표 2-2〉 2023년도 저출산고령화사회연구센터 운영 사업 착수워크숍 일정

연번	세부 일정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자문위원
2023. 2. 24.(금)				
1	11:00 -11:30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우해봉	원내 조성호 원외 김현식 경희대학교
2	11:30 -12:00	국내 인구의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 함의	이상림	원내 최선영 원외 우혜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주대학교
3	13:00 -13:30	출산과 사망에 대한 거시변수 영향 분석	김중훈	원내 장인수 원외 이태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4	13:30 -14:00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 과 정책적 함의	조성호	원내 신운경 원외 유삼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양대학교
5	14:00 -14:30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에 대한 심층 연구	장인수	원내 박종서 원외 송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6	14:30 -15:00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변수정	원내 김유휘 원외 김영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	15:00 -15:30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최선영	원내 함선유 원외 이상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회 미래연구원
8	15:30	난임시술 성과의 현황과 대응과제	이수형	원내 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4 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연번	세부 일정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자문위원
9	-16:00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이소영	원외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00			원내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30			원외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2023. 2. 27.(월)				
1	13:00 -13:30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의 대응과제	이영숙	원내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박명호 홍익대학교
2	13:30 -14:00	베이비부머 생애전환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주보혜	원내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이금룡 상명대학교
3	14:00 -14:30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 시장 참여와 성과	최경덕	원내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안태현 서강대학교
4	14:30 -15:00	인구구조변화 대응 공사적 노후 소득보장 전망과 과제	신화연	원내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양재진 연세대학교
5	15:00 -15:30	증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김세진	원내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이민홍 동의대학교
6	15:30 -16:00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김성아	원내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한장근 성균관대학교
7	16:00 -16:30	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이주거 및 일상생활 분석	조성은	원내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민기태 한국교통대학교
8	16:30 -17:00	이행기 청년 삶의 궤적에 관한 연구:이행 특성의 변화와 요인 분석	김문길	원내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5. 3.(수)				
1	10:00 -11:00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 방안 연구	박종서	원내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외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2. 과제별 자문 의견과 반영 계획

□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 연구의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이민의 <인구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노동시장, 재정, 거시경제 등 후속적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이민의 원 인이나 구성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음. 다만, 이민의 인구학적 쟁점 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소개함.

- 사망력 자료는 자료의 한계로 검토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 과제 측면에서 자료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 기존에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이민(자) 관련 세부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정책 제언에서도 통계의 생산/관리 측면에서 검토될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에 관한 전체적인 연구의 구성은 1) 인구 고령화/감소에 대한 이민의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부분과 2) 이민자의 <간접적인> 인구학적 행동(혼인/출산/이동)을 살펴보는 부분으로 구성됨. 연구의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이민자의 인구학적 행동 부분은 이민자의 실태 파악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망력 부분은 자료의 한계로 검토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책 과제로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

- 인구 시뮬레이션은 이론적 모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민자 관련 인구통계 자료의 부족을 고려하여 인구 시뮬레이션에서는 기존 연구처럼 가능하면 단순화된 가정의 적용을 검토 중임.
- 이민의 총량적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함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연구가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나 이민통계 자료상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이민의 원인 혹은 이민자의 구성 문제를 세부적으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음.
- 인구변동 요인 중 이민은 자료의 한계, 이론의 불충분성, 변동성이 큰 특징으로 인해 출산이나 사망에 비해 체계적인 모형화가 쉽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인구 시뮬레이션은 가능하면 단

순화된 조건을 적용하되, 인구학 이론(안정인구이론)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함.

□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 기존 연구성과의 축척도가 낮고, 인구이동의 전체적 양상을 기술한다는 연구의 취지로 인해 연구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내용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연구성과의 구성을 통해 극복하도록 하겠음
- 지역노동시장은 (청년)인구이동의 핵심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작동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나타난 바가 크지 않음.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구조와 지역의 노동시장의 관계구조를 찾아보고자함
- 연구주제의 특성 상 연구문제와 방법론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져야함. 초기단계에서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역범주를 좁혀 나가면서 전략과 방법론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함
- 인구이동 관련 자료기술분석을 넘어 다양한 질적 보완책을 고민하도록 하겠음
- 기존 연구성과의 축척도가 낮고, 인구이동의 전체적 양상을 기술한다는 연구의 취지로 인해 연구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이 문제는 연구성과의 구성을 통해 극복하도록 하겠음. 초기단계에서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역범주를 좁혀 나가면서 전략과 방법론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함

- 인구이동 자료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료수집 등은 인구가 동통계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자 하며, 더불어 인구 규모 및 구조, 신혼부부 통계 등 인구정태 자료로 함께 활용하고자 함

□ 출산과 사망에 대한 거시변수 영향 분석

- 인구학적 실증연구에서 상식으로 여겨져 온 출산율과 사망률 등 인구율(demographic rates) 대신 이번 연구에서는 출생아수와 사망자수 등 수준변수를 분석의 기본 대상으로 삼고자 함. 따라서 이들 시계열의 확률적 특성에 대한 기초적 관찰과 분석이 모형 구성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초기 연구 작업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기존의 선행 '인구학적 시계열' 연구 가운데 참조할 만한 대표적인 성과들을 선정해 비판적, 분석적으로 뜯어 보고, 인구학 밖에서의 시계열분석 방법론 가운데 인구변수들의 동태변동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초)장기 시계열 모형을 탐색한 연후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적 분석틀에 대한 구상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 시계열적 분석의 방향 설정에 있어 과거 특정 시점에서의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정에 근거한 시나리오 분석이나 미래 인구추계/전망을 위한 예측모형 등을 포함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음. 하지만 인구변동(특히 출산력과 사망력)에 관여하는 각종 요인들의 통시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게 되면 준실험적 함의나 예측에 대한 시사점도 간접적으로는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인구학적 실증연구에서 기본으로 여겨지는 출산율과 사망률 등 인구율(demographic rates) 대신 이번 연구에서는 출생아수와 사망자수 등 수준변수들을 분석의 기본 대상으로 삼고자 함. 기존 연구의 상식에 따르자면 분석의 기초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인구율은 각 시점의 연령별 인구구조와 분포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출산과 사망의 동태적인 변동의 확률 특성을 포착하기보다는 이를 가리는 시점별(횡단적) 인구특성의 총합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따라서 이들 시계열의 개별적, 확률적 특성에 대한 기초적 관찰과 식별, 분석 등이 모형 구성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초기 연구 작업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인구학 밖에서의 시계열분석 방법론 가운데 인구변수들의 동태변동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초)장기 시계열 모형을 우선적으로 살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그런 연후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적 분석틀에 대한 구상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가능하면 제시할 분석 모형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시계열 분석 문헌의 최근까지의 성과들을 넓게 살펴 인구변동에 적용 가능한 참고 사례를 발굴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계획임.
- 기존 인구학 연구에서 참조할 만한 시계열 연구 성과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음. 선행 연구와 관련 문헌을 좀더 꼼꼼히 살펴 이번 연구의 준거가 될만한 사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음.
- 지난 연구는 출산력 특히 출생아수 시계열 분석에 국한하였고 출생-사망(-이동)을 포괄하는 인구학적 제반 요인들 간의 통시적 상호관계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뚜렷했음. 분석 방법론 상으로도 확률론적 시계열 분석이라는 대안적 논의의 초기 단

계에 머물러 실험적 모형 구성 수준을 넘어 충분한 분석적 시도와 함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음. 이번 연구를 통해 그 한계를 넘어 실용적인 의의를 지니는 분석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진해 보고자 함.

- 데이터는 현재 가용한 인구시계열들의 수준변수(출생아수, 사망자수, 연령대별 인구수, 혼인건수 등)의 최대치(월별 관측 주기 기준)를 활용할 계획이라 확률론적 분석으로 위한 별도의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는 없음.

□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 대략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까지 혼인 성비 불균형을 경험하게 될 것이므로 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이르는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다만, 2000년대 중반에 자연 성비로 돌아왔으므로 이러한 효과는 한정적이라는 것은 언급할 예정임.
- 중국의 선행연구도 언급할 예정.
- 출산력 자료도 미혼 인구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분석에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인구 센서스 자료도 검토해 보겠음.
- 결혼할만한 배우자는 개인의 특성이 중심이 될 것이기에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 성비 자체가 결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임.
- 심층면접조사의 주제를 다시 검토하겠음.

□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

- 지역 불평등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서론 내 용어

의 정의 부분에서 언급하고자 함.

- 방향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단방향적 인과적 관계(특히, 인구 변동이 지역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으로의 방향성)에 치우쳐 있던 논의를 보다 확장하여 그 반대의 양상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분석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의도이며, 이에 "인구 변동→ 지역 불평등" 내지는 "지역 불평등 → 인구 변동"이라는 한쪽 방향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두 변인 간 양?향의 상호 작용 관계 즉, "지역 불평등 ↔ 인구 변동(인구 변동 ↔ 지역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함.
- 생활인구 분석은 전체 구성 체계와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지만, 현재의 지역 인구 개념을 보다 확장시킨 것이며, 생활인구 측면에서의 인구 변동과 지역 불평등 간 상호 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시의성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 기인하고 있음.
- 정책적 함의는 지적해 주신 양방향의 논의가 가능함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음. 기존의 논의가 지적해 주신 내용에서의 전자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후자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견지하고자 함.
- 지역 불평등의 개념(구체적 정의와 측정가능한 변수 내지는 지표) 설정을 기본적으로 우선하여 정하겠음. 아울러, 두 변인 간 인과관계와 역인과관계를 포함한 순환구조 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포착하여 연구를 진행하겠음.
- 실증분석이 가능한 자료 확보와 설정에 만전을 기울이겠음.
- 생활인구 분석은 지역 인구 개념을 보다 시의성을 제고하는 측면

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다 심층적인 두 변인 간 연관성 규명을 위한 실증 단계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지역 불평등과 생활인구, 정주인구 동태 간 유기성을 보다 제고하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겠음.
 - 자료의 경우 주간인구 추정을 위해 전국 단위의 특정 기간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국민연금 빅데이터 등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이를 결합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또한 기존에 두루 활용된 행정구역 단위의 집계자료가 아니라 소지역 격자단위 자료()를 새롭게 생성하여 변수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목적과 분석방법과 범위 등에서 차별성을 기하는 동시에, 인구모니터링평가의 본연의 의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 내용을 구성하며 관련 함의를 도출하도록 하겠음.
 - 5장을 별도의 연구과제로 분리하여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장과의 유기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겠음.
-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 해외 관련 제도 검토에 있어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리뷰를 포함하여 수행하고자 함.
 - 동거 경험자 사례 심층연구에 있어서 현재 동거 중인 경우 뿐 아니라 동거에서 결혼으로 이행한 경우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 동거 경험자의 제도 관련 경험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로 파악하겠음.

- 심층연구 대상자에 과거 동거 경험자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연구를 진행하겠음.

○ 국외사례 검토에서 프랑스나 일본이 한국 가족과 다르기는 하지만, 동거 등록 제도가 있는 국가 중 한국과 정확하게 유사한 국가는 흔하지 않아 우선 검토할 제도가 있는 국가를 리뷰하고자 함.

- 오히려 검토 시 한국과의 사회적 환경 및 가족 관련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 그 안에서 차용해야 할 것과 차용하기 어려운 점을 면밀히 살펴보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함.

○ 21년 여가부 가족실태조사 부가연구는 배우자관계 문항이라든가, 비혼동거 가족과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중요한 조사였음.

- 따라서 본 과제에서 보고자하는 비혼동거의 특성을 관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임. 조사의 목적, 내용이 상당히 다름. 또한 여가부 발주의 정책연구라 비공개자료로서 이용이 불가능함.

○ 21년 여가부 비혼동거 실태조사는 원자료 분석은 불가하지만, 발표된 결과를 일부 활용할 계획임.

○ 동거 관계에서는 육아아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육아의 어려움을 정확히 들여다보는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인구정책 차원에서 비혼 문제가 갖는 함의와 연결시키도록 시도해 보겠음.

○ 이성관계의 동거에 대해 연령층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고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지만, 심층연구 등에서의 대상자 확보 측면에서는 청년층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됨.

□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자원을 이전하는 방식과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를 종합하여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음.
- 이를 연구설계에서 '동거여부'와 '비동거 부모의 이전'을 하나의 모형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보완하겠음.
- 위험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방법을 마련하겠음.
- 위험에 대한 대응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선행연구를 동원하고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 단일시점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계열 변화 또는 다른 사회와의 비교를 연구설계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지는 더 고민이 필요함.
 - 시기적 변화 자체를 강조하는 연구는 아니지만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여부 등을 측정할 수는 있을 것임.
 - 그러나 이 연구의 문제제기와 결론 등에서 선행연구를 동원하여 다른 사회와의 비교적 관점을 포함할 수는 있음.
- 질적 조사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혼합방법론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함. 연구설계에서 양적 자료 분석과 질적 자료 분석이 적절하게 통합되지 않은 문제로 사료됨. 통합방법론 설계를 보완하여 목차에 반영하겠음.

□ 이행기 청년 삶의 궤적에 관한 연구:이행 특성의 변화와 요인 분석

- 연구범위를 적절히 설정할 수 있도록 착수단계에서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해외사례는 복지레짐별 국가들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 대신에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론적 검토의 장이나 정책함의 의 장에서 절 수준으로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이행의 영역은 노동시장과 가족형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각 영역에서의 계층별 이행 격차를 분석하고자 함. 그 밖에 제안해주신 것과 같이 사회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3개년 연구 구성에 대한 제안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계획대로 수행하더라도 정책함의 부분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검토에 있어서 선행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개괄적 접근을 계획하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제안해 주신 데이터 분석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적연구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종단연구가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한국노동패널과 한국복지패널 중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를 선택하고자 함.
- 인구정책적 함의가 강조될 수 있도록 인구인지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구 배경, 정책함의 부분은 물론이고 이론적 검토에서도 인구학적 관점이 충분히 견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가족형성의 측면보다는 개인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동시에 진행되는 유사연구와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 진행상황을 모니터하겠습니다.

□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 출산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 캐나다, 러시아 사례 분석 결과를 자세히 검토하고, 보고서 목차를 재구성할 예정임.
- 출산을 제고 효과 분석, 효과의 이질성 분석 등에 사용될 방법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임.
- <계량분석 관련> 분석 시 활용할 데이터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할 예정임.
- <해외사례 관련> 해외 아동수당 사례 제시할 때 선별 지원과 차등 지원을 구분해서 설명할 예정임.
- <정책효과성 관련> 출산 관련 효과를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적절하며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으므로 출산 관련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임.
 - (특히 지원 금액(월 10만원)이 적고, 아동수당 추진 기간이 5년 미만인 점, 관련 데이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적자원 변화까지 보는 것은 시기상조임.)
- <재정전망 관련> 현행을 포함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실시할 예정임.
- <목차 관련> 보고서 목차를 재구성할 예정임.

□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의 과제

- 기존에 산출 결정요인 분석 모형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이의 결과를 조사 정리하는 것으로 대체
- 제도 개정과 신규 제도 도입의 영향을 반영하겠음.

- 출산 제고 효과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OECD 국가군 연구, 일본의 지자체별 관련 성과분석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 연구 수행계획을 보다 잘 반영하고 과제의 특성이 나타나도록 연구과제명을 변경하겠음.
 - 연구방법이 착수워크숍 자료에 부족하게 실려, 이를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겠음.
 - 연구 착수 이전에 충분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선행연구의 추가 보강을 통해 연구내용 및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겠음.
 - 수입 쪽 연구는 소득세 구조에서 아동양육가구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와 조세지출 중 EITC, CTC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임.
 - 추후 연구과제명을 연구수행 내용이 보다 잘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정하겠음.
- 난임시술 현황과 대응과제 : 생식세포 기증 시술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제3자(미혼), 비배우자(기혼)에 있어서 정자, 난자 기증에 대한 쟁점, 즉 제도권에서 허용하지 않은 보조생식술과, 제도권에서 허용하는 보조생식술을 모두 다뤄 연구 범위가 방대함. 이로 인해 주요 쟁점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원내외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범위를 좁히려 함.
 - 연구범위가 명확해 짐에 따라 그에 맞게 설문조사 대상자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음.
 - 전반적으로 연구내용과 범위가 넓고 많다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동감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범위를 좁혀서 그 안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내용과 방법을 재설계하도록 하겠음.

- 기존의 윤리적, 사회문화적, 법률적, 도덕적, 제도적 쟁점 검토/정리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이해집단/전문가 대상 자문, 의견 조사 등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 연구범위를 명확히 한 후 이에 맞는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 베이비부머 생애전환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생애전환기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연구범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음. 또한 자문의견에 따라 은퇴시점의 생애전환기를 함께 다루기 위해 연구대상을 1, 2차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집단으로 확대할 계획임.
-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상황을 포함한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용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2차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겠음.
- 3장 분석에도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틀을 적용하여 분석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겠음. 이를 통해 보고서가 일관된 논리적 구성을 갖추도록 하겠음.
- 생애연속성 관점의 경력 활용방안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던 사람 위주의 지원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인정함. 저숙련, 저학력 집단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추가로 고민하겠음.
- 생애전환기 개념과 함께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참여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다만, 고령자의 전반적인 사회참여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연구의 중요한 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참여

의 범위를 개별 민간, 공공일자리 또는 봉사활동 등으로 한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대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연구에서 다루는 범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자문위원의 제안대로 고령자의 활동영역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통해 의미있게 제시하고자 함. 계획된 전문가 조사 또는 FGI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정책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생애전환지원 관련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국외 사례를 수집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겠음.
-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성공사례와 함께 실패사례 또는 참여 저해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다양화하여 구성하고자 함.

□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간 관련성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음.
- 실증분석과 제도분석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체적 구성을 보완하도록 하겠음.
- 국가별 실증분석 결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실증분석을 위한 분석방법을 충분히 검토 후 적절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일가정양립실태조사, 장기요양실태조사 데이터 외에도 노후보장패널, 복지패널, 여성가족패널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구성하겠습니다.

○ 행정자료의 활용가능성도 검토하겠습니다.

□ 인구구조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만 다루고 총량적인 수입지출전망을 시계열 흐름으로 제시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로 다층 노후소득보장수준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재정계산과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제시할 계획임

○ 단년도 과제로 기획단계에서는 세대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려고 했으나 국민연금 DB 등을 검토하고 외부 연구진과 논의하여 세대별 뿐 아니라 소득계층도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선행연구는 국내사례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위주로 검토하였으나, 의견주신대로 인구학적 관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추가 검토하고자 함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공동 연구진과 하나의 분석틀에서 다루므로 연구진행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 해외사례는 방법론 측면에서만 다루려고 했으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재정방식별 특성을 고려하여 스웨덴, 캐나다, 독일 등 사례를 다루는 장을 추가할 계획임.

○ 퇴직연금의 경우 분석할만한 패널자료가 없어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DB를 활용하여 가입패턴과 가정을 활용하여 세대별 노후소득수준을 분석하고자 함.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퇴직연금을 준

공적연금으로 역할정립에 성공한 네덜란드, 스위스 등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정책적 함의는 외부 연구진을 활용하여 보완할 계획임

-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소득보장수준 분석에 대해서는 외부자문의견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 (결론)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 중심으로 연구를 좀 더 포커싱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 (국외사례 분석) 정책을 초점화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음
- (연구범위 조정) 중장년층 1인가구로 한정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음
- (연구방법)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방안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 (국외사례분석) 일부 국가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 (초고령사회 적응/대응의 관점 적용) 실태분석 과정에서 중장년층의 향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고려해 볼 예정임
- (구체화된 정책방안 제시) 정책적 방안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음
- (연구의 핵심내용에 대한 고민) 법, 제도적 쟁점을 파악하고, 사회 구조적 개선방안을 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의 의도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음
- (연구내용과 연구명 일치 필요) 중고령자 가족구조의 변화는 본 연구의 3장 1절에서 현상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제시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을 적절히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연구 내용의 명확화) 중고령자 1인가구의 이질성에 따른 사회정책 및 법적 개선방안과 보편적 욕구에 따른 사회정책 및 법적 개선방안 모두를 제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음

-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생애를 다루면서 중장년기를 다루도록 하겠음.
 - 인구정책에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겠음.
 - 관련 쟁점 및 분석자료의 특징을 논의하면서 연구 범위를 구체화 하겠음.
 -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면서 저소득층 혹은 중산층 등 대상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겠음.
 - 청년기부터 노년기를 아우르려는 이 연구의 생애 범위에서 아동·청소년기의 특성과 관련 제도의 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소득·자산 결합 분석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이론과 방법론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겠음.
 - 부채를 고려할 방안을 검토하겠음.
 - 인구정책에의 함의를 도출하면서 중장년기 관련 논의를 검토하겠음.
 - 중간워크숍에서 분석내용을 구체화하면서 분석자료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 연구 관련 쟁점을 정리하면서 연구 범위를 명확히 하겠음.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음.
- 복지체계에 대해 검토하겠음.

□ 가족과 출산조사 개편 방안 연구

- 조사 영역을 구분하여,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영역별 연구진이 2021년도 조사자료와 유사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영역 구성과 문항 개선 방안 도출할 계획임.
- 시험조사는 조사 방법론적 관점과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여, 향후 조사체계가 변경될 경우를 대비할 계획임.
- 현행 조사에서 결혼 전 인구행동과 인구행동 영향요인에 대한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결혼 전 여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결혼과 출산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할 계획임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사업 성과

제1절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발행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제3절 인구포럼 운영



제 3 장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사업 성과

제1절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발행

1.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인구변동과 인구통계의 체계화

-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은 변동의 폭이 크고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임.
 - 이러한 극적인 인구변동은 우리사회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출산율 증가라는 목표에 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했지만, 대부분 정책들의 최종 목표인 ‘출산의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있어서 인구변동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없다는 한계는 정책의 효과성이나 적절성에서 있어서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음
 - 인구변동 및 인구변동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

해 인구관련 정책을 둘러싼 논의와 담론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즉, 어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출산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삶의 질 개선', '양성평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인구변동 모니터링(demographic monitoring) 체계의 구축과 적극적 활용의 필요성

- 인구 변화의 현황과 변동의 체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변동을 체계적으로 관측하여 필요한 인구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생산·구축하고, 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공개하는 인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인구 모니터링이 사회 및 정책 영역에서 인구변동에 대한 이해를 실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구축과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중요한 인구지표 중에는 1970년대를 전후부터 산출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eg. 합계출산율 등), 그 이전의 지표에 대해 역사인구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함
- 또한, 인구 관련 지표는 자료원이 분산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지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지표를 집대성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구정책연구실에서 202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인구변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기존 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지

속적인 인구통계 모니터링을 위한 연보 작성을 목적으로 함

- 2023년은 2020년 구축된 지표를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특히 1970년대 이전의 지표 산출 가능성에 대해 역사인구자료 수집 가능성을 포함하여 검토해 보고자 함
 - 예를 들어, 합계출산율의 경우, 1970년부터 제공되고 있으나 1970년 이전 및 일제 강점기의 인구동태통계를 수집할 수 있으면 산출 가능할 것임
- 또한, 기존의 지표 산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구 관련 지표를 집대성하는 작업을 통해 인구통계자료집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연보 발간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연구내용

□ 시범사업(2022년) 모니터링 구축 방안 연구 검토

- 인구통계의 주요 개념 정리
- 인구 모니터링 지표 산출 자료원 정리

□ 인구 모니터링 지표 산출

- 출생과 출산
 - 출생률, 출산율, 출생의 구성 및 특성, 재생산율 등 출생, 출산 관련 지표
- 혼인과 이혼
 - 혼인, 이혼 관련 지표

- 사망
 - 사망률 변동 및 사망원인별 사망률 관련 지표
- 인구이동
 - 국내/외 인구이동 관련 지표
- 인구의 증감
 - 전국 및 지역 단위 인구 증감 관련 지표
- 인구의 구성
 - 연령 및 성별 구성 관련 지표
 - 혼인 상태 및 가구/가족 구성 관련 지표
- 인구의 분포
 -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집중 관련 지표
- 국제 동향
 - 세계 인구 현황과 전망 갱신, 인구변동 요인, 규모와 구조 관련 지표 검토
- 정책 대안 제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개선 등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가.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와 빠른 속도의 인구의 고령화 진행 등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면서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매 5년 마다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시작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이 마무리되었고,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어 추진 중임

- 지금까지 마무리 된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15년 간의 추진에도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은 심화되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한편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가족 다양성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하는 등 한국의 가족 변화를 이해하고 정책적 방향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음

○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4차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함

-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출산율이라는 기존의 목표 대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로 설정해 “전 생애 삶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함
- 이를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제고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적응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저출산 현상과 관련된 한국 가족의 다양성 부분이 지속적으로 강조됨

□ 한국 가족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설정된 저출산 정책 분야의 가족 다양성 목표가 합목적이고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는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추진 과제로 수행되는지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해야 할 것임

○ 현재 과제 설정 및 모니터링 방식은 단기적이고 분절적인 계획 수립이거나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에 기초한 1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계획 수립과 성과평가 주를 이루는데 이것만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이나 점검에 무리가 있음

○ 따라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추진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성공적인 수행 기반 마련과 향후 수립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저출산 정책의 발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과제 제안이 필요

- 저출산 현상 대응을 위해 기본계획 중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

에 대해 세부 실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근거로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가 필요함

나.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분야 가족 다양성 관련 주요 정책 추진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이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4차 기본계획 내 저출산 영역의 가족 다양성 관련 주요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세부 실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발전된 저출산 분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다. 주요 연구내용

- 저출산 대응 분야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의 배경 및 현황
 - 저출산 대응 정책의 가족 다양성 관련 배경 이해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까지의 정책 추진과 변화 검토 등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저출산 분야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 검토
 - 세부 정책별 정책 목표, 정책 범위, 정책 수요자의 범위 등
- 저출산 대응 분야 가족 다양성 관련 주요 정책 모니터링

- 가족 다양성 관련 주요 정책의 적절성 모니터링
 - 저출산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해 저출산 대응으로서의 필요성, 합목적성 등 분석
- 가족 다양성 관련 주요 정책 추진의 효율성 모니터링
 - 제도의 인지도, 예산 등 분석
- 저출산 대응 분야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 발전 방향 제시
 - 저출산 대응 분야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저출산 대응 분야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의 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방안 제시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고령사회

가.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고 인구구조의 고령화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은 약 20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1명 미만을 기록함(2018년 0.98명, 2021년 0.82명). 202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21).
-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함.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임(통계청, 2021).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이 시행중임
 - 1~3차 기본계획은 개인을 노동력 및 생산력의 관점에서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한 반면, 4차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관점이 전환되며 사회구조적인 원인 해소에 중점을 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12월 15일자 보도자료, p.3)

- 4차 기본계획의 고령사회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의 단계적인 고령인구 진입, 후기고령자의 증가 등에 따른 고령층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며 소득, 보건, 돌봄, 주거 등의 영역에서 추진전략을 제시함.
 -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1)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2)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을 제시함.

- 또한 이번 4차 기본계획은 고령사회 적응 정책의 일환으로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와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함
 - 정부는 주도적 역할을 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능동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접근의 중요성을 반영하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12월 15일

자 보도자료, p.3), 인구구조 변화의 뉴노멀에 대응하여 연령으로 인한 장벽 없이 모든 연령대의 통합적인 사회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임을 밝힘(대한민국정부, 2020, p.42~43)

* 기대수명 연장, 혼인·출산 연령 변화, 교육·노동 기간 연장 등 생애주기 변화는 그간 ‘청소년기 교육훈련’, ‘청년·중년기 노동’, ‘노년기 여가’의 연령분절적(age-segregated) 접근으로 구축된 사회제도들의 한계 노정(대한민국정부, 2020, p.163)

* 연령통합은 연령으로 인한 장벽을 없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회 안의 제도, 역할, 지위 등에 있어 진·출입을 자유롭게 하며, 여러 연령대의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며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상태를 의미(정경희, 2004; 정순돌 외, 2016; Riley & Riley, 2000; 정순돌 외, 2021 재인용)

○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전 지구적인 고령화 현상 등에 대응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을 지속

□ 2021년부터 추진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사회 대책이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해소라는 전환된 패러다임에 조응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요구됨

○ 4차 기본계획이 1~3차와 차별화된 지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추진방향과 추진과제의 적절성 등을 짚어보고, 세부 실천 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령사회 대책의 개선지점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나. 주요 연구내용

- 고령사회 정책 모니터링 분석 틀에 관한 고찰
 - 사회정책의 모니터링 방법론
 - 사회정책의 모니터링 적용 사례 등
- 고령사회 대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 고령사회 대책 수립 배경 파악: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변천 등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사회 대책 검토 등
- 고령사회 대책의 모니터링
 - 세부 정책별 계획의 적절성(필요성, 합목적성 등) 모니터링
 - 세부 정책별 이행의 효율성(인지도, 예산 등) 분석
- 고령사회 대책의 정책 방향 도출
 -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 방향성 도출
 - 고령사회 대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방향 제시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

가.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변동은 이에 대응한 정책은 그간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방향성이 재정립됨
 - 2000년대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은 2020년 이후 인구 자연 감소등 더욱 심각한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임.
 -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2021년 0.81)을 기록함
 - 2021년부터 출산율 향상의 목표 대신 삶의 질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앙 정부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운영에서의 방향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인구정책 연구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 현재까지 인구정책 연구는 전년도에 계획된 연구의 틀에서 수행됨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음
 - 이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진단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을 위해 정책 현안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의제를 도출하고자 함
 - 다학제적 인구정책협의체 운영
 - 정책 현황 분석
 - 정책 방향성 설정

- 정책 의제 도출

다. 주요 연구내용

- 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목표와 비전 진단
 - 제시하고 있는 정책의 비전과 목표의 제4차 기본계획과의 조응성 및 시의성 등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방향성 설정
 - 정책 협의체 구성과 운영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및 정책 연구의 방향성 설정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의제 개발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의제 도출
 - 정책 의제에 따른 연구 과제 도출

제3절 인구포럼 운영

1. 인구포럼 운영 목적

- 인구포럼은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를 통해 사회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며, 나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운영됨.
-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쟁점을 공유함.
- 연구 성과 확산은 물론 인구문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 관련 사회 대응에 대한 대국민 접점의 기제로써 활용
- 2023년 총 3차례의 인구포럼과 2차례의 공동 포럼을 개최

〈표 3-1〉 2023 인구포럼 진행 일정

진행회차		주제	일시 및 장소
제30회 인구포럼		최근 이슈와 정책방향	2023년 4월 20일 달개비 회의실 및 온라인(Zoom) 생중계
제31회 인구포럼 (국회·한국보건 사회연구원 공동 포럼)	제31-1회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 협력	2023년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제31-2회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	2023년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31-3회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2023년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32회 인구포럼		출산율 하락 시대의 출생과 가족에 관한 국제비교	2023년 10월 25일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1층 로렐룸 및 온라인(Zoom) 생중계

주: 제31회 인구포럼은 국회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시리즈로 시리즈로 3회 실시하였음.

2. 제30회 인구포럼

□ 주제 : 최근 이슈와 정책방향

□ 개최목적

-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반사업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과제 중 최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두 주제인 ‘일-생활 균형’과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13:30~16:30
- 장소: 달개비 회의실
- 방법: 대면 및 비대면 생중계(Zoom)

□ 주요내용

- (세션1) 일·생활 균형
 - (주제 발표 1)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취업자의 개인·가족 특성을 중심으로
 - (주제 발표 2) 일·생활 시간 사용 현황과 제도 활용
 - 토론
- (세션2) 청년의 일과 결혼
 - (주제 발표 3) 계층유형별 청년기 노동이력과 불안정성의 계층화
 - (주제 발표 4) 계층유형별 결혼 전망과 결혼지연의 동기

- 토론

○ 종합토론

3. 제31회 인구포럼

□ 국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 포럼 (국회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정책포럼과 공동 운영)

가. 제31-1회 인구포럼

□ 주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 협력

□ 개최목적

○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와, 인구규모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속가능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특히,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년 6월 20일(화) 10:0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방법: 대면

□ 주요내용

- (주제 발표 1) 인구 변화와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 (주제 발표 2) 저출산 대응정책과 정부-민간 역할 분담
- 토론 및 종합토론

나. 제31-2회 인구포럼

- 주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
- 개최목적
 -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등 현금 지원 제도에 대한 성과 논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년 7월 25일(화) 10:0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방법: 대면
- 주요내용
 - (주제 발표 1) 아동수당 효과 분석
 - (주제 발표 2) 부모급여 도입과 현금지원체계 개편 쟁점
 - 토론 및 종합토론

다. 제31-3회 인구포럼

- 주제: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개최목적
 - 부모의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과 돌봄 공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년 8월 24일(목) 09:3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방법: 대면
- 주요내용
 - (주제 발표 1) 유연근무제와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 (주제 발표 2) 돌봄 공백과 정책 대응
 - 토론 및 종합토론

라. 제32회 인구포럼

- 주제: 출산율 하락 시대의 출생과 가족에 관한 국제비교
- 개최목적
 - 아시아와 유럽 국가가 공통적으로 출산율 하락 현상을 대면하고

있으나 각 국가가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사회문화, 환경, 가치관, 정책 등이 모두 다름. 일본, 대만, 네덜란드, 스웨덴의 사례를 파악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년 10월 25일(수) 10:00~18:00
- 장소: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로렐룸
- 방법: 대면

□ 주요내용

- 일본, 대만, 네덜란드, 스웨덴, 한국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
- 발표 내용에 대한 지정토론 및 라운드테이블 토론 진행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연구과제 성과

제1절 인구정책기획단 2023년 수행 과제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세부과제별 내외부
평가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연구과제 성과

제1절 인구정책기획단 2023년 수행 과제

- 2023년 총 45개 과제 수행
 -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내 18개 연구과제, 6개 사업 수행
 - 출연금 과제 2개(연구개발적립금 1개, 수시 1개), 수탁과제 19개 수행
 - 수탁과제의 발주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

〈표 4-1〉 인구정책기획단 2023년 수행 과제 목록

구분	과제명	
출연금 과제	(일반/연구) 인구 현상 심층 분석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출산과 사망에 대한 거시변수 영향 분석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
		인구추계 모형 구축과 활용 방안
		가족과 출산조사 개편 방안 연구
	(일반/연구) 저출산 현상의 정책 대응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이행기 청년 삶의 궤적에 관한 연구:이행 특성의 변화와 요인 분석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의 과제
		난임시술 현황과 대응과제 : 생식세포 기증 시술을 중심으로

118 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구분	과제명
(일반/연구) 고령 사회 정책 대응	베이비부머 생애전환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인구구조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일반/사업) 인구변동 및 정책 추진 모니터링 연구 기반 조성	(사업)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발행
	(사업)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사업)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고령사회 (사업)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 (사업)인구포럼 운영 (사업)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연개금)	인구고령화시대 범죄 특성과 사회정책대응방안 모색: 고령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시) 지역에 기반을 둔 아동돌봄 안전망과 다주체 협력 방안
(AURI)	아동 돌봄 실태 및 돌봄 취약 요인 심층 조사 용역
(강원도)	제2차 육아기본수당 정기 평가 용역
(경상북도청)	생활(관계)인구 활용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
(교육부)	영유아·초등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에 따른 비용지원구조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2024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연구
(국민경제 자문위원회)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정책 추진 시 정책환경 분석 및 향후 정책 시사점
(국토연구원)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전략 : 의료분야
(기획재정부)	미래 고령층의 사회적 기여와 노후경제수준 전망 연구
수탁 과제	중장기 영유아 돌봄 체계 개편 방안 연구
	정부 정책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도 분석 연구
	(보건복지부) 돌봄위기가구 내 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한중일 인구정책 비교 연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연구용역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2023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및 핵심성과지표 활용방안 연구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연구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 연구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세부과제별 내외부 평가

□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 내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착수 보고 때도 언급한 것처럼 최근 이민을 저출산 대책, 즉 인구감소대응 정책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정치권, 매스컴 등)이 많이 보이고 들린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민을 인구감소대응 정책으로 고려하려면 국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최근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대 크레이머 교수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이민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같이 이민으로 성립된 국가라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민으로 인한 새로운 인구 유입에 대한 저항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용도 빠를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족의 출현 등으로 이제서야 타 민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기틀 정도를 마련했을 뿐, 아직 한 민족, 단일민족 등으로 대표되는 타민족에 배타적인 민족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함. 따라서 만일 대규모의 이민을 받아들인다면, 한국 사람의 현재 가치관이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임. 그리고 사회통합 관련해서 최근의 프랑스 폭동도 본질적으로는 이전에 받아들인 난민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을 인구감소대응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은 논리적임.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지금까지 이민을 인구감소대응 정책으로 생각하는 문제는 증거 기반보다 직관적인 측면이 컸고, 이번 보고서의 발간으로 이민을 인구감소대응 정책으로 고려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됨.
- 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이민의 측면에서 UN에서 2001년 발표한 replacement migration은 조금 오래된 자료였으나,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의 자료로 산출하고 있어서 앞으로 매우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됨.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이번 보고서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이민 숫자이지만 이를 실현하였을 경우에, 100년 뒤에는 현재 인구가 유지되긴 하겠지만, 인구구성 측면에서 순수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는 전체의 약 10% 고, 150여 년 뒤에는 0%에 가까워진다는 된다는 결과는 앞으로 이민 정책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을 시사함.
- 다만, 단기적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도 필요하고, 현재 많은 영역에서 외국인 인력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인구통계학적 분석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지표를 산출하였으므로 학술적인 기여가 크다고 생각됨.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연구진행이 충실하게 이행되었음.

○ 외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본 보고서는 이민자의 수에 따른 인구 추계를 진행한 후 이민자들의 특성과 관련하여, 혼인, 출산, 이동 혹은 거주지역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음. 이러한 구성 체계는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갖는 중요성 혹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도에 따른 배열과 유사하다할 것임. 이민에 따른 인구 추계에 있어서도 simulation 뿐 아니라 수리적 모형을 활용한 논의들도 포함함으로써 보고서의 포괄성이 매우 높음.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simulation을 활용한 인구 추계와 출산율 계산이나 특정 거주지에 대한 집중도를 계산하는 방식들이 해당 문헌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최근의 기법을 반영하고 있음.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분석 자료가 너무 최근의 것이어서 코로나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발견이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점임.
- 예를 들어, 이민자의 기간출산율을 계산하면서 2020년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코로나로 인해 불안정하게 정착한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며, 안정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이 조사에 응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계출산율이 이로 인해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음. 이주민들에 대한 simulation 자료로 2016년부터 2020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2020년 코로나의 예외성을 생각해본다면 2015년부터 2019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을까 하는 생각도 듦.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이 연구는 향후 이민 관련 분야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준거 보고서가 되어 관련 연구자들의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본 심사자는 확신함.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한 한국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실현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이민자의 이입이 필요하다는 발견과, 코호트 출산율과 기간출산율에 차이가 있다는 발견, 이민자들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는 발견들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들 또한 지니고 있어 이민 관련 정책입안자들이 필독 보고서가 될 것으로 확신함. 영어로 번역된다면 세계 모든 나라의 독자들에게 한국 이민 연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의 이민 상황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수 보고서의 영어 번역 서비스가 있다면 이 보고서를 적극 추천함.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사소한 한가지 제언을 하자면, 보고서 요약본 20쪽에서 보여주는 2015년과 2020년의 이행 확률은 $x-y$ 가 바뀌어야 할 것 같음. 다시 말해, 2015년이 행으로 오고, 2020년이 열로 오는 것이 통상의 이행확률 표가 아닌가 생각함. 보고서의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거주지 및 이동과 관련하여 남녀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남녀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봄.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본 연구는,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연구계획서에서 서술한 것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각 장의 방법론뿐 아니라 자

료의 활용이나 장별 구성에 있어서 연구계획서에서 기획한 것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음.

□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 내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현재 이 연구에는 1) 인구이동의 시계열적 변화와 2) 인구이동의 비대칭성이 인구분포의 왜곡에 미친 영향의 두 주제가 교차하고 있음.
- 이 두 주제를 모두 다루더라도, 장별로 소주제를 구분해서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 첫번째 인구이동의 시계열적 변화는 연도와 지역스케일, 이동지표를 일관되게 분석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인구이동 변화의 양상이 시각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음.
- 두번째 인구이동의 비대칭성과 인구분포의 왜곡은 지역스케일*연령*성별의 교차 분석을 일부 선별된 연도에 대해 실시하여, 이동과 분포 사이의 연관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함.
- 20대 여성의 가장 큰 변화는 대학진학률 증가, 노동시장 정착도 강화, 미혼율 증가 등임. 이러한 인구사회적 변화를 인구이동 측면에서 조명해준다면, 학술적인 가치가 클 것이라 기대함.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연구방법, 자료, 절차는 명료하고 구체적임. 다만 일관된 분석

틀을 여러 연도 등 분석대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을 고려했을 때, 최근 연구동향이 자료 분석에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인구이동의 주요한 이론과 기존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가 정리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연구결과는 인구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인 만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음.
- 인구이동의 비대칭성과 인구분포의 왜곡(인구위기/소멸지역)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제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현재 중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고, 결론도 도출한 점에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임.
- 보고서의 형식에 맞게 잘 작성되리라 기대함.

○ 외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인구소멸’ 중심의 지역 인구 분석 수준을 넘어 사회 경제 지표 등을 활용하여 최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을 분석하여 인구 지역 불균형의 원인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됨. 분석의 틀은 심플하지만 명확하게 제시되었다고 사료됨. 그러나 지역 차원의 인구변동을 해석하고자 하였던 기존 국내외 연구들의 주요 논의 및 결과들과 상호 비교하면서 해석하고 정리해 준다면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주요 결론이나 시사점이 논리적인 부합성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임.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연구방법 및 절차는 구체적임. 다만, 국내외 국내인구이동 관련 연구 및 이론에 대한 문헌 검토내용의 추가적 제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인구의 지역별 불균형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는데, 해당 연구들의 접근방법과 상호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방법의 적절성을 기술해 줄 필요가 있음.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Chained migration의 가설적용과 지역유형별 인구이동 흐름의 최근 변화 결과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됨. 지역인구변동의 추세를 수도권과 지방의 이동, 연쇄 이동,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이동 양상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 등으로 다면적으로 통찰하여 인구동태의 원인을 해석하였다는 부분에서 학술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함. 인구의 지역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에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함.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인구이동의 측정과 해석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방법이 있는데, 인구학적 관점에서 인구이동에 필요한 변수들과 방법들을 확보하고, 이 변수들과 활용한 분석방법의 당위성(필요성, 중요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이 부분에서 충분한 사례검토와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연구계획에 의거한 연구진행은 충실했다고 사료되며, 향후 지역연구정책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 출산과 사망에 대한 거시변수 영향 분석

○ 내부 자문위원

-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선행연구, 각각의 항목에 대한 거시변수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와 해석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거시적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구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영향이 시기별, 지역별로 달라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자료 구축과 정교한 모형 구성을 바탕으로 분석을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여짐.
- 출산 및 사망 각 범주별 정교한 계량분석방법이 적용되었음. 공통적으로 각 종속변수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독립변수를 투입한 것으로 보임. 또한 시군구 및 시도 단위의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고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통제변수를 고려하는 등의 추가적 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여짐.
-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역시 최근 관련 이슈와 국내외 연구 동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짐.
- 각각의 장, 절 등 세부 목차별 연구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가독성과 명료성을 확보하였다고 보여짐. 특히, 자료 구축과 모형 설명을 비롯하여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분석결과 표와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주요 결과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보여짐. 다만, 분석결과 해석이나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등 보고서 전반적으로 경제학적 시각에서 기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전공 등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경제학적 학술용어에 대하여 각주 등으로 자세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령, 제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10-year rolling regression의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결과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림의 구체적인 의미와 구성 의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임.

- 당초의 연구계획 내용에서 과제 제목 및 연구 내용을 변경하여 제목과 연구 내용 간 일치성이 확보되었으며, 연구도 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보여짐. 특히 국외의 관련 사례의 논의와 비교하는 형식을 통해 정교한 실증분석 결과를 심도 있게 해석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시사점과 추후 연구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점은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로 이해됨.

○ 외부 자문위원

- 거시경제변화가 혼인, 출산, 사망 등 주요 인구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시기, 지역,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이질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본 연구는 시의적절한 연구로 사료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패널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가용한 최신 자료 구성을 통해 최근 추이를 살펴보고 있어 연구 주제와 내용에 부합하는 연구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합리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거시변수 중 노동시장 변수의 영향을 주로 살펴보고 있으며, 이질성 감안을 위해 지역 패널자료를 구

성하여 고정 효과 패널분석을 진행하여 연구 주제를 고려한 합리적 변수 선정 및 분석체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별 고용 변수 구성과정에서 일자리의 질을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 설명변수를 구성할 수 있을지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론적 배경에 의한 충분한 통제 변수 설정을 통하여 추론의 정확성을 제고할 여지는 존재함. 사망률 분석에서 지역별 선형 추이 통제나 연령구조 통제를 비선형 추이 통제, 초고령 비중 통제를 통해 개선할 여지가 존재하며, 경기 순행성과 역행성이 주요한 논의 주제일 경우 실업률 외의 경기변동 변수의 영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여 다층적 정보를 제공한 의의가 있으나 지역별 이질성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고정 효과 패널분석 결과만을 제시하고 나머지 결과는 각주나 부록으로 제공하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음. 본 연구가 진행한 노동시장 양적변수의 영향 분석을 통해 학술적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상당하나, 노동시장 질적변수 영향과 추가적 통제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면 추가적 학술적 정책적 기여가 기대됨.
- 연구계획서에서 밝힌 이질성을 고려한 거시변수 영향 분석이 충실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거시동인을 식별하여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모색함. 다만, 계획성에서 밝힌 경제정책과 인구정책의 연계, 장래 인구변화와 경제전망의 연계는 연구 기간 제약으로 향후 추가적 논의가 필요

□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 내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본 연구는 최근 청년 코호트의 출생 성비 불균형이 청년들의 혼인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한 연구임. 한 지역의 출생 성비 불균형이 반드시 그 지역의 결혼 성비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출생 성비가 균형이었다고 해도 결혼 성비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 인구 이동 때문임. 그리고 결혼 성비 불균형은 다시 생애 미혼율로 연결될 수 있음. 이러한 연결 고리 (출생 성비 x 결혼 성비 x 생애 미혼율)가 한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인구 이동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여기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함의가 있는지 논리적인 기술이 이루어지면 유용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출생 성비에 대한 정의는 명확한데,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미혼 인구 성비” 혹은 “결혼 성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서울시의 경우 결혼 성비가 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혼인 연령 코호트의 출생 성비는 어떠한지 궁금함. 그리고 서울의 결혼 성비는 균형적인데 남성의 생애 미혼율은 40.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함. 결혼 성비의 균형이 반드시 혼인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 미혼 남녀의 성비가

숫자적으로 균형을 이룬다고 해도 혼인 의향이 없거나 혼인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혼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연구 계획서 대비 연구 진행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외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이 연구는 과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출생성비 불균형이 최근 결혼시장과 혼인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선행연구는 물론 성비 불균형의 현황, 성비 불균형과 혼인의 관계, 미혼 남녀의 FGI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음. 다만 보고서의 구성과 각 장이 일부 분절되는 인상을 주고 있어 수정과 편집이 필요해 보임. 예컨대 양적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분석 방법을 따로 구성하거나 또는 제 4장의 해당 내용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출생성비 불균형, 혼인시장에서 성비 불균형, 미혼남녀의 반응이 밀접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중국의 출생성비 불균형에 관한 절이 있는데 위치나 구성 등을 고민해 볼 여지가 있음.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4장에서 출생성비 추이는 불균형이 있었던 1980~2000년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임. 제 4장 제2절 지역별로 미혼 인구의 성비와 인구 천 명당 초혼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미혼인구의 성비와 혼인시장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미혼인구 성비와 SMAM(singulate

mean age at first marriage)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 또한 방법론 측면에서도 같은 장의 후반부의 수준과 좀 더 조용할 것으로 여겨짐. 일부 일본에 관한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과 비교하거나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Lee-Carter모형으로 성별 미혼율을 추계한 결과는 성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데차라리 S지표를 추계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음.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현재 보고서가 과거(출생성비 불균형), 현재(혼인시장), 미래(미혼남녀 FGI)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초점이 출생성비, 미혼율, 인구이동(수도권 VS 지방)으로 조금씩 다름. 출생성비 불균형 자체 보다는 현재 혼인 감소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 정도로 제시하고, 미혼남녀 FGI에서는 '이동'에 대한 언급을 조금 줄일수 있다면, 보고서의 일관성과 명료성이 제고될 것임. 이 연구는 국내에서 드물게 과거의 출생성비 불균형을 현재의 혼인 감소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성별, 연령별 혼인율/미혼율을 토대로 실제 혼인시장에서 성비불균형의 정도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음. 또한 남성의 생애 미혼율이 여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전반적으로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일정과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보고서가 외부용역과 원고위탁 등을 통해 작성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연구의 중요 단계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됨. 남은 연구기간에 원고의 구성이나 내용,

편집 등 보고서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

○ 내부 자문위원

- 본 연구는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을 밝히고, 정책적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였고, 기초 특성 분석과 총 4가지 심층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주요한 연구 결과는 이 연구 주제의 내용으로 적절하며,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탁월하게 분석 제시되고 있음.
- 다만, 보고서의 논리적 일관성을 위하여, 서론 부분에서 필자의 입장을 명료히 정리하면 독자의 이해에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됨. 즉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의 관계 특성이 상호적인지, 두 요인 중 하나가 선행하는 지에 대해서 저자의 입장을 더욱 명료하게 제시하면 가독성이 좋아 질 것임. 결론 장을 두어 전체 연구 결과의 함의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함께 제시하면 보고서의 완결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 전반적으로 연구 방법의 선택과 적용이 적절하며,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탁월함. 선행 연구의 정리, 기초 분석, 4가지 심층분석 주제가 논리적 일관성으로 적절히 연계되고 있음. 특히 1인당 GRDP, 사업체 수 등 지역 불평등 요인을 4가지 심층분석에서 일관되게 분석함으로써, 보고 전체의 일관성이 두드러지고 있음. 39-40쪽 선행 연구 정리 부분에서 적절한 인용표기를 활용하면 설명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음. 3장 출산 관련 지표

설명에서 조출생율과 합계출산율 변이계수 추세가 2020년 이후 하락하는데, 출생아수 변이계수는 계속 증가는 이유도 본문에 간략히 설명해주길 권고함. 146쪽 일부 문단의 맥락을 명료히 해주길 권고함. 183쪽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관계 설명의 맥락을 점검해주길 권고함. 203쪽 세종도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설명에서 누락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제4장, 제5장의 분석 내용은 독창적인 연구 성과로써 의의 있다고 판단됨. 그동안 지역 불평등 연구에서 인구 변수는 배경 변수나 여러 독립변수의 일부로 다루어진 선행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연구로써 의미가 있음. 그리고 가용한 자료 범위 내에서, 시기를 구분하여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의 관계가 변화하는 맥락을 추적한 부분도 매우 큰 학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보고서의 문장을 계속 다듬어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연구 계획 내용이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됨.
- 인구를 사실인구와 상주인구로 구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은 생활인구가 더욱 중요하게 조망받는 현시점에 매우 의미미한 연구라고 보임
- 생활인구가 지역불평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지표임을 실증한 것은 생활인구의 활용 가능성과 후속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
- 다양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증하고 방대한 문헌 고찰은

지역불평등과 인구의 기초연구로서 큰 가치가 있으나, 정책연구기관의 보고서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결론에 정책기여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에 대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방법론과 자료는 매우 적절, 선행연구 및 최근 연구 내용도 적절하게 반영되었음
- 가독성 제고를 위해 분석 절차, 연구흐름도를 다이어그램, 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함. 특히 4개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와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활용한 지표를 표로 제시
- 변이계수를 활용한 이유와 장점에 대한 서술이 추가되면 좀 더 분석 결과가 설득력 있을 것으로 보임
- 요약문의 '결과 및 시사점'은 본문 내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개략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됨. 그럼에도 23p의 앞부분 내용은 논리적 도약이 있어 보임. 좀 더 보완하면 논리가 보강될 것임
- 정책개선 방안의 경우 내용 제시가 부족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임
- 폭넓은 방법론을 활용하여 인구변동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로 연구계획서에 의거하여 충실히 진행됨
- 연구계획 내용 중 '한국사회의 지역불평등의 특성 고찰'의 경우, 연구의 시간, 범위의 제약상 진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향후 연구로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

□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 내부 연구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본 연구는 비혼 동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 한국 비혼 동거 현황, 비혼 동거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관련 국내외 제도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 비혼 동거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였음.
- 이론적 배경과 관련 2차 자료 결과에 근거하여 비혼 동거 집단을 구분하고 인터뷰를 실시하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졌음.
- 장별 구성과 관련하여, 3장 2절을 보완하거나 위치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예를 들어 3장 2절에서 비혼동거 유형 구분을 보완하여 5장 1절 FGI 집단 선정과 연결하거나, 3장 2절과 4장을 하나의 장으로 묶는 등을 제안함)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한국의 비혼 동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2차자료 분석, FGI 인터뷰, 국내외 제도 분석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비혼 동거 관련 2차 자료를 망라하여 현상을 파악하였고, 비혼 동거 집단별 공통점과 일부 차이를 적절하게 분석하였음.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한국의 비혼 동거라는 현상을 개념화하고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큼.

- 개인이 생계합침의 편익(경제성/편의성, 친밀성/안정성, 공평한 관계 등)과 결혼의 편익(구속력, 제도 대상으로 들어옴, 사회적 인정 등) 내에서 비혼 동거를 선택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지점임.
- 결론에서 연구자가 출산장려 중심의 정책적 관심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매우 동의하며, 출산 장려 정책이기 보다는 비혼/기혼과 무관하게 출생을 보호하는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279쪽)
- 비혼 동거를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범주화하는 전략보다는, 가족/파트너로서 권리 부여의 시급성이 있는 영역(응급상황, 의료연명/자기결정, 장례 등)부터 가족/보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더 현실성 있을 것으로 보임. 돌봄은 제도 패러다임이 가족 관점이 아닌 돌봄 욕구를 가진 당사자 중심으로 개선됨에 따라 비혼 동거 가족도 배제되지 않고 보장받게 되는 방향이 적절한 개선 방향으로 사료됨.
- 제도 상 비혼 동거의 기준까지 제안하고자 한다면, 비혼 동거와 법적 결혼 사이의 기준 지점(주거를 합침, 생계를 합침, 관례적 결혼, 법적 결혼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 보고서의 명료성 차원에서, 66~67쪽 2개 표를 하나의 표로 보여주면 어떨지 제안함. (결혼의향-동거의향, 결혼의향-법적 결혼의향, 결혼의향X-동거의향, 결혼의향X-동거의향없음)
- 또한 5장1절에서 혼인이행/이혼 등과 같은 조건을 구분한 근거를 간략하게 보완할 것을 제안함.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연구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며, 중간워크숍의 논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음.
- 국외 출장 등을 통해 프랑스 PACS 이용 경험자 인터뷰까지 분석에 포함하였음.

○ 외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연구 주제와 내용이 부합되고 내용과 체계가 매우 논리적이고 일관됨
- 한국 가족 맥락에서 비혼 동거의 특성을 다양한 비혼 동거 집단에 대한 FGI를 통해 밝혀낸 본 연구는 최근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비혼출산 및 비혼동거 제도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연구라고 생각됨. 특히 한국의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주로 지적되는 ‘제도화된 가족’을 기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자녀 출산의 향에 대하여 비혼 동거 집단 내에서도 ‘결혼’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있다는 점을 밝혀낸 점도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됨.
- 동거를 경험함으로써 결혼의 허들을 자연스럽게 넘을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를 보면 향후 한국사회에서 동거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다면 동거를 경험하면서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어 혼인을 증가를 기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도 확인하고 있어 시사점이 높은 연구라고 생각됨.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연구 방법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에 매우 적절함

- 최근 정책 동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자료 수집과 분석도 적절함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학술적 기여 뿐 아니라 정책적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 제언 관련) 지금까지는 비혼 동거에 대하여 현행 법적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여 이들을 ‘가족’으로 명명하고 포섭하는 방식의 제도화를 주로 검토해왔음.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당연히 떠오르는 의미에서의 ‘가족’을 기피하고자 비혼 동거를 선택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다른 방식의 제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의료법상 보호자는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보호자로 가족 이외에 다른 방식의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이는 1인 가구의 급증 등 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검토 필요한 내용으로 생각됨. 즉 개인화의 진행 등을 고려할 때 가족 단위의 각종 사회정책의 설계를 개인단위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가족 변동 관점에서 정책적 관심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동거보다는 지속적 동거가 아닐까 생각함.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연구계획서의 2차 자료 분석, 심층면접조사, 국외출장 등의 연구 방법 이행함. 또한 최근 한국의 결혼이행 및 비혼동거 관련 변화, 비혼동거 관련 국외사례 및 한국 제도 현황, 한국의 비혼동거 특성 및 욕구, 비혼동거와 혼인 인구 비교, 정책 방향 등 주요 연구 내용도 빠짐없이 충실하게 구성하고 있음.

□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 내부 연구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서론에서 서술하고 있는 본 연구의 과제는 1) 청년의 성인이행기 동안 가족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2) 청년의 성인기에 이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3) 부모의 지원은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로 구성됨.
-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인이행기에 직면하게 되는 위험의 내용과 원인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함. 현재 원고에서는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성인이행기 위험의 내용이 3장 2절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 과제별로는 1)번 과제의 경우 3장 3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4장에서는 2)번 과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임. 3)번 과제의 경우 양적자료와 질적면담 결과를 종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질적자료의 경우 어디에 포함되게 되는지에 대한 장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2장과 3~4장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성인이행기의 위험과 이에 대한 가족의 다차원적인 대응의 실태와 원인, 경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질적인 면담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특히 지원을 받는 부모세대와 지원을 하는 청년세대라는 두 세대를 동시에 검토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사점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함.
- 2장의 양적자료 분석의 경우 가용한 소득 자료를 토대로 청년

기 부모의 역할을 검토하고 있음. 청년기 이행 과정에서 빈곤 위협의 수준을 제시한 점, 한부모 가구 등 실질적인 위험 상황에서 가족의 사적이전의 역할 등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보임.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남은 연구기간 동안 연구의 목적과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장 3절의 경우 부모지원의 계층화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는 계층적 양상이 명확해 보이지 않음.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층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결과의 구성을 개선하면 좋겠음. 자녀세대의 경우 안정 도달 여부에 따라서 부모의 지원이 달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모세대의 경우 소득 수준 등을 토대로 지원의 양상이 다른지가 검토되어야 함. 현재의 원고에서는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결과로 보여서 계층적 양상이 드러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부모의 지원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 서술에서 보면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래의 소득 능력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나, 세계관의 구축 등 정서적, 교육적 측면의 완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다는 점에서(특히 아동기) 부모의 지원이 단지 경제적 가능성이나 위험 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 이는 지원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함. 다만, 사회적 위험의 심도와 부모 지원의 내용과 유형에 대한 개념적 구분이 다뤄지면 좋겠음.
- 경제적 이유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서술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이유에 따른 지원 철회라기 보다는 독립적 생활을 위한 교

육적 목적으로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철회를 언급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지원할 수 없는 사례가 계층적 특성을 부각할 수 있어 보임. 다만, 부모의 입장에서 면담 시 이를 솔직히 진술하기 보다 방어적 입장에서 자녀의 교육적 측면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있어보임.

- 청년 세대와 부모세대의 여타 특성에 따른 가족지원의 실패와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면 좋겠음. 예를 들어 딸과 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차이가 일부 언급되고 있음.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역시 부와 모, 딸과 아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음.
- 4장에서는 자녀지원에 대한 부모의 해석의 경우 가족의 지원이 전승되는 측면을 갖는지(본인도 부모로부터 지원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3장에서 논의하듯 불안정 노동시장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지가 확인되면 좋겠음.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연구를 위한 양적 분석과 질적인 인터뷰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남은 기간동안 연구 결과의 구성과 해설을 통하여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외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연구 주제와 구성, 분석 방법과 글쓰기 등 연구의 주요 요소가 서로 잘 맞물려 있는 좋은 연구라고 생각함.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선행연구를 충실하게 검토하셨고,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자체의 완결성이 매우 높음.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연계를 중요한 과제로 말씀 드렸는데 최종 원고는 이를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음.
- 다만, 보고서를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함. (1) 문제제기에 비추었을 때에, 또 이후 질적 연구와 관계를 생각했을 때에, 2장의 분석 차원을 빈곤/비빈곤으로 설정한 것과 ‘이행’을 ‘구조’로 살펴보려는 것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음. (2) 3장에서 면담 사례의 생애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3) 3장과 4장의 구성에서 동거(분가)와 이전이라는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면담 내용을 조직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음(2장에서 포착하지 못한 부모 동거 의미의 다양성이랄지, 타이밍의 중요성 등을 강조). 전체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소절을 하나 추가해서 다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함.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원고의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 분석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었음. 문장도 잘 쓰여 있어 읽기에 좋았음. 성인이행기의 특성을 세대 관계의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매우 높은 작업이라고 생각함. 성인이행기에 있는 청년의 빈곤 수준과 양상을 확인하는 결과 등은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함.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연구계획을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함.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모두 충실하게 수행하셨음. 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청년기 부모-자녀 동거율 추이' 분석이나 패널 자료를 활용한 '생애 궤적' 분석 등 몇 가지 수행하지 않은 분석이 있으나 최종워크숍 원고의 전체 구성을 보았을 때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정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음.

□ 이행기 청년 삶의 궤적에 관한 연구:이행 특성의 변화와 요인 분석

○ 내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전체적으로 보고서의 완결성을 높이고, 장, 절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이 이행경로 특성 파악, 이행 궤적의 차이 규명, 이행 인식의 집단 간 차이 분석 등이라면 부제를 "이행 특성의 변화와 요인 분석"(현재)로 하는 것이 다소 어색함. "이행 유형과 이행 인식 분석" 등으로 변경 검토 바람.
- 3장의 해외 사례의 경우도 전체 보고서 내용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임(청년에 대한 해외 복지정책이 주 내용임). 해외의 청년 이행기 관련 지표(연령별 경활률, 고등교육 이수율, 결혼 연령, 첫 출산 연령 등)를 중심으로 두고 나머지는 보론 등으로 보내는 것이 어떨지 검토 바람. 그런 의미에서 3장을 축소하여 2장 이론적 배경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바람.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패널 분석, 웹조사, 질적 조사(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청년기 이행 궤적의 유형 분석(4장), 이행 인식 분석(5장), 취약계층 이행 특성 분석(6장) 등을 수행하고 있어 방법론적으로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로서는 미비된 부분이 있음.
- 이론적 배경에서 최근 관련 선행 연구와 연구 동향을 좀 더 보완하여 뒷 부분의 분석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으면 좋겠음.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4장의 패널 분석은 그림 등으로 가독성을 높이려고 했으나 복잡한 분석 결과를 좀 더 쉽게 풀어써 주어 풍부한 결과를 도출해 주면 좋겠음.
- 5장의 인식 분석은 장 내 정합성과 분석 결과의 가독성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해 주면 좋겠음.
- 지금까지 청년 이행 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서론이나 결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면 보고서의 활용도가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예를 들면, 단순한 기술 분석은 부록으로 제시하고 본문에서는 F테스트의 결과와 주요 차이의 그림(p.108에 제시되어 있는), 회귀분석, 잠재집단분석 등을 통해 SES, 성, 지역 등에 따라 이행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 등)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웹조사 등은 완료되었으나, 현재로서는 분석, 집필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남은 일정 동안 좀 더 신속하게 보고서를 집필하고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여 주기를 기대함.

○ 외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이 연구는 청년에 성인 이행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청년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점차 성인전반의 정책과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40대 후반까지도 청년으로 규정하는 조례 개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연구이며 연구주제와 내용이 부합함.
- 이 연구는 청년의 이행기 특성이 어떠한가? 청년 내부에 이행 경로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이행 경로의 특성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인가? 성인됨의 표시(mark) 중에서 계층별 차이가 있는가?라는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음. 이 연구는 연구주제보다는 연구방법에 따라서 나누는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는 대다수 연구가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 적절해 보임.
- 다만 이번 연구보다는 3년 간의 연구 설계에 있어서 3차연도에 정책 방향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을지, 1차연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제별로 실태와 정책을 다루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임. 이 같은 측면은 2장 해외사례 분석에서 제4절 유형별 사회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해외사례에서 정책을 다루었다면 국내 분석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청년 생애사 이행 과정은 시퀀스분석(sequence analysis)을, 이

행기 청년 인식조사는 평균차 검증을, 잠재집단분석과 로짓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심층면접 등 몇 가지 분석 방법의 결과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아직까지 원고를 취합한 수준이며 연구 결과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일부 개조식 서술이 그대로 남아 있어 수정이 필요함.
- 정책과 정책 활용 가능성은 7장 결론 부분이 작성된 뒤 검토가 가능함.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선행연구검토는 1-3월 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미완성인 부분이 있음.
- 해외사례 추진 정도는 보고서로는 확인을 하지 못하였음.
- 설문조사는 예정대로 추진된 것으로 보임.
- 연구계획서에서 통계분석은 6월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 심층면접은 11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계획서에 이에 대한 추진 일정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 내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전반적으로 연구주제, 목적에 맞게 연구 내용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었음.
 - 단,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아동수당 지급의 적절한 목표 설정, 인구변화 대응(출산율 제고)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수당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 있음.
 - 4장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가 3장과 4장 사이에 있어 논리적 연결성이 떨어짐. 다음과 같이 순서 변경을 제안함: 2장 이론적 배경에서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 확인, 4장의 결과, 현금지원제도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 확인, 아동수당제도 목적 혹은 목표 수정 필요성 제시 -> 3장 아동수당 이용자, 수요자 욕구 확인-> 5장 욕구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 모델 적용, 재정 전망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5개의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분석, 설문조사(이용자, 잠재 수요자, 전문가), FGI, 유사제도 출산율 제고 효과 분석, 8개 모델 아동수당 재정 추계와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충실히 연구 수행
 -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최신 동향 반영, 자료수집과 분석도 대체로 적절함
 - 시나리오 분석 모델 수정, 제안: 정책 수요자 조사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 증가, 지원 금액과 기간 확대 요구 -> 18세 미만으로 단순 지원기간 확대가 아닌 연령별/구간 차등 시나리오 적용 고려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정책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분석 시나리오 적용,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술기여도가 높고 정책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함
- 장별 결론의 명확한 제시, 장간 연결성 및 가독성 제고를 위해 장별 소결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연구 계획대비 수행의 달성도, 충실성 매우 높음; 3~5장은 각 장이 별도의 연구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충실하게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판단됨.
- 6장 결론 보완시, 장별 소결 제시 및 결과를 반영, 논리적 연계성을 높여 통합적 결과 제시 필요.
 - 특히,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수당의 목표가 출산율 제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제언할 필요성이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개선 모델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아동수당 제도 개선의 모델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제시되었으므로 모델에 고려되지 않은 영유아기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는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등과 저소득 가구 유형별(청소년부모, 한부모, 조손가구 등)로 제공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등 다른 현금 지원정책을 고려한 연구자의 제도 개선의 방향, 관점 제시 필요

○ 외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최근 정부의 현금 지원정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 주제가 향후 정책 대안 마련에 시의성을 지님.
- 인구변화에 따른 아동수당 정책 재정 전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주제에 맞게 이용실태 및 정책요구분석, 정책의 효과 분석,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준한 재정 추계가 진행됨.
- 사용된 분석틀의 선정 이유, 도구의 설명, 분석에의 특징과 도출 가능한 시사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연구가 파악하고자하는 아동 수당의 목표설정, 인식 및 만족도 파악, 효과 분석, 소요재정 추정에 대해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 이용자와 예비이용자 설문조사, 계량분석, 소요재정 추계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고 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됨. 다만, 많은 연구내용과 그에 대한 연구방법 개요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보고서의 가독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 연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2021년 통계청 장애인 구추계 결과를 이용하였으나 현재 그 추계보다 인구가 더 적은 상황임을 고려해야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연구 목적과 내용에 준하여 논리적 맥락을 유지하여 장이 구성되어 보고서 내용구성이 명료함.
-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양육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지자체 출산 지원금 등)이 확대되는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아동수당의 개선안 마련

뿐 아니라 비용지원정책의 효과 분석과 개선안 마련에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본 연구는 착수 시 계획한 연구계획에 준하여 추진되었고, 계획 시 1,500명 대상 조사보다 많은 2,300명 대상 조사를 실시하였음.
- 연구 계획 시 목표로 제시한 아동 수당의 목표설정, 인식 및 만족도 파악, 효과 분석, 소요재정 추정 등의 내용이 수행되었음.
- 다만 최종 보고 단계에서 결론과 제언이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추후 보완을 요함.

□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의 과제

○ 내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연구 주제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 재정의 과제'이므로 일반적인 저출산 정책 평가가 아닌 재정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조세 지원 부분이 재정의 역할에서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출산 양육 비용과 지금 조세 지원의 양을 비교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함
- 전체적인 출산 양육 혼인 비용의 조세 지원을 포함한 재정 투입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면 애초에 연구의 목적이 굉장히 잘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함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자료 분석 및 문헌탐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향후 10년이 저출산 대응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정책 대안 마련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남은 연구 기간동안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외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본 연구의 주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의 과제 연구’로, 서론에서 밝힌바 “예산과 재정의 측면에서 전체 저출산 대응 정책의 특징을 찾고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를 목적으로 함.
- 현재 제시된 보고서 목차를 보면, 조세측면의 정책과제를 다루는 장은 있지만 재정지출 측면의 정책과제를 다루는 장은 빠져 있음.
 - 제6장의 제목이 “... 조세지원 현황분석”이라면 제7장에서는 “... 재정지출 지원 현황분석”이 나와야 연구체계가 완비된 모습으로 보임.
- 현재 보고서는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보고서의 쪽수가 300쪽을 넘는 점과 연구 일정을 고려할 때, 재정지출 측면 관련 내용은 후속연구로 진행하는 것도 모색해 보길 바람.
 - 특히 일본사례가 전체 보고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이때 프랑스사례와 대칭적 구조를 갖춘다면 일관성이 있어 보일 것임.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연구방법은 사례분석 및 통계분석을 주로 하고 있고 사용·파악된 정보는 최신 정보 및 통계여서 이런 측면의 연구방법은 적절하다고 봄.
- 다만, 연구의 포괄범위 관련 조세지원 분석에서는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분석하지만 기업의 행태도 저출산 대응 성과에 중요한 요인인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 측면의 분석도 포괄할 수 있기를 바람.
 - 또한 최근 결혼관련 비용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 공제한도를 상향하려는 움직임도 소개해 주면 좋겠음.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연구보고서의 가독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주 가임기 여성 인구추이 분석, 저출산 예산범위에 대한 분석, 상세한 일본사례 및 일본의 저출산 재원마련 방식 등은 향후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조세지원 현황분석 파트도 정책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봄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현재 자문위원에게 제공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할 때, 일부 장 및 절의 내용이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남은 일정을 감안할 때 충분히 연구를 주어진 일정 속에 마무리

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재정지출 관련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정이 빠듯할 수도 있어 보임.

□ 난임시술 현황과 대응과제 : 생식세포 기증 시술을 중심으로

○ 내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비전문가 난임시술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워 2장에 난임시술, 생식세포 기증시술, 보조생식술 등의 개념을 소개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2장을 개념, 현황, 관리체계로 구성하거나 관리체계와 문제점은 별도의 장으로 구분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 국외 현황을 이해하는데 국내 현황 -> 국외 현황 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 국가의 비교표에 한국을 추가하고 관련 법률이 도입되거나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시점, 각 국가의 특성을 표시하면 주요 외국과 우리나라의 제도 격차, 국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독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4장의 사회적 수용성 보다는 사회적 인식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임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질적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생식세포 기증수증시술 경험과 사회적 인식을 심층적으로 조사한 연구라고 생각됨. 공역시술 경험자 질적자료를 사회적 인식조사와 같이 챕터를 구성하

고 질적연구 결과물을 충실히 분석하여 공여기술 경험자가 경험한 제도의 미비점을 드러내고 개선방향의 근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보고서가 논리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생식세포 기증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보고서가 작성되면 좋겠음. 보고서 5장에서 제시한 국내 생식세포 기증수증 기술 관리체계 개선 방향성 중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고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친자 확인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함.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생식세포 기증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필요한 연구라고 판단되며 연구가 충실히 진행되었음.

○ 외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본 연구는 생식세포 기증 기술을 중심으로 해외와 국내의 현황과 관리체계를 살펴보고, 국내의 사회적 수용성을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좀 더 내용적 전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생식세포 기증에 대한 법제도적 현황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

인 생식세포 기증 시술 및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우선 앞 장에 배치하고,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와 법제도적, 사회문화적으로 유사 혹은 상이한 4개 국가의 생식세포 기증 시술의 법제도 및 관리체계의 현황은 어떠한지, 이를 제도화함에 있어서의 쟁점/이슈는 무엇이고 각 국가별 서비스의 내용과 형태, 범위 등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언급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 장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기존 3장의 공여시술 경험자 대상 질적조사는 제4장의 난임부부 대상 설문조사와 묶거나 혹은 병렬적으로 기술을 해서 실제 생식세포 기증이 필요한 대상자의 실제 사용 실태와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쟁점/이슈)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이들은 생식세포 기증/수증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보여주면서, 일반인의 인식과 비교 제시하는 것으로 지금의 구성을 좀 더 체계화하는 것도 가능해 보임. 이때 앞서 제시한 4개 국가의 쟁점/이슈별 내용별로 난임부부 및 일반인의 인식을 결합시켜, 2-4장이 연결성을 갖추도록 하고, 이런 연결성을 1장에서 강조하여 독자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3장의 3절 생식세포 기증·수증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술 경험자 대상의 질적조사도 좋지만, 전문가 대상의 FGI 등의 결과가 있다면 이를 여기에 제시하고 좀 더 전문적인 의견에 근거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음.
- 다만 현재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 중에 제목에서의 '성과'과 명

확히 정의되어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음. 여기서의 '성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식세포 기증 자체가 '성과'인지, 이를 통한 임신성공이 '성과'인지 등 연구 내용에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히 제시되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2-3장의 제목에 제시된 '관리체계'가 많이 강조되는데 왜 관리체계를 살펴보게 되었는지 왜 중요한지 등을 본문에서 이미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통해 약간 언급을 하지만, 좀 더 부연 설명을 통해 명확히 제시되면 좋겠음

- 마지막 5장에서, 아직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여서 제시된 정책과제(안)이 제목 형태, 이슈 형태로만 나열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해외와 국내의 쟁점/이슈와 우리의 현 실태 등을 고려해서 몇 가지로 묶거나, 이를 테면 법제도적 측면, 윤리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등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해당되는 쟁점/이슈에 대해서 해결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단기적·중장기적인 과제 순서로 해서 제시하는 것이 좋겠음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본 연구에서 활용은 방법, 국내외 선행연구 자료 고찰 및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은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함. 다만 전반적으로 국내 사례, 해외 사례, 심층면접, 인식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으로 확인된 내용을 충분히 잘 전달되도록 구성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구방법과 절차 등을 한 눈에 보면서 이 보고서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는지를 도표 등을 통해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함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아직 연구가 마무리 단계여서 전반적으로 각 챕터별, 그리고 전체적으로 엮고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좀 더 명료하게 작성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해 보임
- 특히,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 그리고 정책적인 의미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연구자의 의견과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 등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강조하면 좋겠음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본 연구는 착수 시점에 연구 제목과 내용에 큰 변화 과정을 겪었고, 이로 인해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럼에도 변경된 연구 주제와 내용에 맞게 충실히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해서 제시하고 중요한 연구결과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전반적으로 연구 이행에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 여겨짐. 그럼에도 각 챕터와 이를 구성하는 내용에서의 연계성이 잘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해외 출장이나 전문가 자문/간담회 등의 내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확인된 결과 등도 보고서에 담겨진다면 좀 더 실질적인 근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업계획서 대비해서 연구 내용은 이행되었고, 다만 해외 사례 분석에서 일부 국가가 사업계획서와 다른데, 국가 선정과정에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 보이고 현재 보고서에 담긴 4개국을 왜 선정했는지 등에 관해서 현재 1장의 내용과 방법에도, 그리고 2장의 해외사례 챕터에도 없으니 이를 간략하게라도 정리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업계획서 상에는 난임시술

기관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기증 난임시술 현황과 개선 요구도에 관해서 질적면접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 보고서 상에서는 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 베이비부머 생애전환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내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라는 거대 인구집단이 노인인구로 편입됨에 따라 본 세대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생애전환 지원에 관한 연구주제로 의미 있고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음.
 - 2장에서 활동형태 구분을 통한 지원 사업들을 잘 정리하고 있음.
 - 3장에서 실제 베이비부머 세대 유형별 기술분석을 잘 보여 주고 있음. 특히 이들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모든 면에서 이질적인 집단임. 이들의 대표치로 평균을 사용할 경우 가장 의미를 못가지는 집단이기도 함. 이런 측면에서 이들 집단을 유형화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5장의 FGI에서도 3장에서의 유형을 고려해 집단을 구분하고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논리적인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함.
- 다만 집단 4와 집단 5의 경우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가 낮고 기술하였는데, 집단 5의 경우 사회활동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이들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현재 진입한 이들의 확장 측면'에서 주요 대상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집단 특성별로 현재 진입한 이들의 확장 측면, 이전에 미참여에서 참여로 변화 될 수 있는 하는 측면으로 나누어, 3장에서 구분한 유형별로 목표를 나누어 살펴보면 좋을 듯함.
- 다만, 3장 분석 시 성별 구분한 유형 구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음. 3장 결과를 보면 결국 어느정도 소득수준이 있는 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사회활동 비율이 약 1%로 매우 낮음. 이는 이들은 여전히 지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개인이 다수임. 이들은 다수가 일을 하고 6개 유형 구분에 있어서도 종사상지위, 소득 정도, 학력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유형은 아마도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됨. 사회참여 관련 중요한 요인은 소득과 시간활용 측면이 크게 작용할 것임. 보고서 상에서도 자원봉사 미참여 이유를 보면 아예 관심없는 분들을 제외하면 경비 부담, 2차 베이비부머는 참여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각 7% 가까이 나타납니다. 표본 크기를 고려 시, 현 6개의 유형을 축소하더라도 성별 구분을 통한 접근은 필요해 보임.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연구내용이 현재 베이비부머들의 사회참여 실태를 여러 분석들을 통해 잘 설명해 주고 있음. 문헌검토와 양적, 질적 분석에서의 결과를 결론까지 잘 녹여내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제언을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현재 해외 사례등 정책 관련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듯하며 이러한 사례분석들을 진입 요인, 참여활동 확장측면에 대한 부분과 유형별 특성을 잘 연결하여 분석결과가 가진 함의와 정책간의 연결고리가 설명

될 수 있길 기대함. 또한 현재 진행된 풍부한 해외 사례의 경우 별도 장으로 묶어도 좋을 듯함.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중간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음. 그리고 중간보고 이후 진행이 충실히 잘 된 것 같음. 특히 기존 사회참여라는 범위를 생산활동으로의 참여를 제외한 '활동적 노후' 측면에서의 경력활용, 자원봉사 등으로 범위를 설정함에 따라 연구 주제가 더욱 명료해진 것 같음. 정책제언을 포함해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 주신다면 보고서 완성도가 한결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외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본 연구는 연구제목과 부합되게 베이비붐 세대가 대량으로 은퇴하는 시점에서 이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임.
- 최종 결론 부분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주요 내용만 제시하였지만, 보고서 전반에 걸쳐 양적, 질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정책방안들의 실효성을 높였음.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를 자원봉사 및 시민서비스, 지역공동체활동,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양적 연구로 실시된 고령화패널 분석에서 활용된 사회참여 변수는 자원봉사,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 활동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지역공동체활동이나 특히 사회적 경제활동 영역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회참여라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 고령화패널 분석에서 본 연구의 목적이 생애전환기에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사회참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초점을 흐릴 수 있음.
- 질적조사에서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공급자(베이비부머)의 입장뿐 아니라 수요자(특히 사회적 경제활동 및 지역공동체 실무자)의 입장을 질적조사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음.
- 질적조사(베이비부머 인터뷰) 내용인 제5장에 대한 소결을 도표 5-2를 활용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보고서 내용 중에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견인을 위해 ‘유급 자원봉사’를 제안하였는데, 이를 시민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자원봉사의 기본정신이 무급성).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연구보고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해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아직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분석 내용을 통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됨.
- 제시된 정책방안들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혹은 민간시설이나

단체들에게 중요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최종 워크숍에서 일부 분석내용(중간지원조직)과 결론 내용이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사료됨.

□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 내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해당 보고서는 연구계획서가 제시한 목차와 구성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었음.
- 중고령 가족 돌봄 여부와 노동시장 참여 성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음.
- 통계 분석의 결과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출되었음.
- 통계 분석 이후 수행된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이 조금 더 보완된다면 결론부분에서 좀 더 통찰력 있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통계 분석과 관련하여 연구방법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 만약 추가가 가능하다면 통계 분석에서 돌봄여부와 경제적 만족도 사이에 노동시장 참여 관련 변수가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면 논의를 명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음.

- 정책 사례 분석과 관련해서는 분석의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면 좋을 것 같음. 개별 국가들의 사례를 나열식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비슷한 유형의 국가 사례를 범주화하거나 한국에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사례를 깊이 있게 다루었으면 함.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연구결과는 매우 분명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었음.
- 한국 사례를 통해 돌봄 참여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함.
- 정책 사례 분석의 내용을 보완하여 계량분석 결과와 함께 결론을 도출한다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연구는 전반적으로 계획서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함.

○ 외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서론, 선행연구, 현황 및 주된 실증 분석, 제도 검토 등 보고서 구성의 구성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음.
- 본 보고서에는 아직 신지 못했으나, 서론, 일부 제도 검토 및 결론 등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 주된 분석 틀은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실증 분석론으로 구체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계량적 분석이 주된 내용이며. 선택편의 및 내생성을 고려한

계량적 방법론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 고령화 인구 대표적 패널조사 자료인 고령화 패널을 주된 자료로 활용하여 대표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추후 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정책 관련하여 FGI 활용하는 것도 좋겠음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보고서 구성의 구성이 체계적이고, 가독성에 문제가 없음.
- 또한 인구 고령화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본 보고서에 기반한 수발에 관련한 노동시장 참여 변화는 사회정책 복지정책에 설계에 대한 함의가 크다고 판단됨. 특히, 장기요양보험 제도 설계와 관련되어 활용 가능성이 큰 연구임.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착수 시 계획에 따라 착실히 진행되었다고 판단함
- 실증분석, 제도 관련 연구 등 착수워크숍, 중간 심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자료 분석을 위주로 한 연구로 국외 출장 등은 필요하지 않았으며, 연구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함.

□ 인구구조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과제

○ 내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보고서의 틀은 적절히 구성되었지만, 각 장에서 검토하는 내용의 균형이나 장별 연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보임. 현재까지 2장과 3장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2~3장은 공적연금에 비해 퇴직연금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보임. 공사적 연금을 아울러 균형적인 수준의 검토가 이루어지면 보고서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함. 4장의 분석과 5장의 정책 과제도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기에 5장의 정책 과제 도출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4장에서 분석 모형이 구축되면 좋을 것으로 보임.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노후소득보장 전망에 기초하여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4장의 분석 모형에서 사용된 가정의 현실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현재의 퇴직연금 가정은 상당히 낙관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나리오의 사용도 검토할 수 있음.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전망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차별성을 갖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모형 설계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임.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통합적으로 전망하는 연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설계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면 향후 노후소득보장 개편 논의에서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임.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잔여 연구 기간 동안에 공동연구진의 연구 속도를 독려하고 연

구진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외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세대별로 노후소득보장 전망 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연구 목표인 데, 노후소득 전망에 필요한 연금제도별 노후소득보장 수준 전망이 아직 미흡함. 세대별로 보되, 소득수준별로 전망하는 것이 필요. 그리고 주택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을 포함해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함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p.27. 기초연금 재정전망. 과소추정 여부 확인 필요. 현재도 GDP 대비 1% 정도인데, 노인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미래에도 1.1%로 추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 예정처 추계는 3% 수준
- p.95. OECD pensions at a glance 집계 기준 확인 필요. 공적연금+mandatory private+voluntary private(voluntary도 적용율이 80% 넘으면 포함으로 알고 있음). 한국의 기초연금은 pension test를 넘어 자산조사하므로 공공부조로 카운트해서 제외. 그리고 퇴직연금도 적용율이 낮고, 일시금 위주 수령이라 연금지출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참고로 OECD SOCX에서 공공사회지출 중 연금지출(즉, Old-age + cash)에서는 기초연금 포함. 퇴직연금은 public social expenditure는 아니고, mandatory private에 포함. 단, 일시금 제외 연금형태의 지출만 포함됨

- 노후소득보장 전망을 위해서는 출생코호트별 월평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급여액 산정시, 소득 수준별로 A값대비 노령연금액을 표현해주는 것이 필요.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고, 보험료부과소득 상한도 있기에 소득별로 차이가 크게 날 것이기에 그러함. 그리고 국민연금+퇴직연금 급여액 산정 시에도 소득 수준별로 추산하는 게 필요
- 기초연금도 국민연금과 더해서 소득보장 효과를 전망하는 게 필요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개별 연금제도별로 장기 노후소득보장 전망 연구들이 이미 존재함. 이 연구가 새롭게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다층 구조하에서 국민,기초,퇴직,주택이 세대별/소득수준별로 미래에 얼마만큼의 소득보장을 해 줄 수 있을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줄 때 임
- 인구구조변화를 주요 변수로 하여 노후소득보장성을 연금제도별로 보는 것인 만큼, 정책과제 제시 파트에서 부과방식 연금제도(국민, 기초)의 재정안정화 개혁 불가피성을 전제하고, 인구구조변화와 무관한 적립형의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함.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퇴직연금 이외 연금제도는 아직 연구진행이 다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특히 주택연금은 그러함

□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 내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내용 전개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루어짐.
- 1인가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전환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체계는 여전히 가족중심의 가구구성을 가정하여 1인가구가 가지는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저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본 연구는 적절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판단함.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방법이 적절하게 적용되었음. 특히 양적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1인가구의 과거와 현재 특성을 이해하고 미래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시함.
- 선행연구 결과 또한 충실하게 검토하여 가독성있게 서술하였음.
- 질적연구에서 당사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정책 개입의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대체로 연구결과가 명료하게 서술되었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2차자료 분석, 당사자 심층면접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보고서의 완성도를 위해 아래 의견을 드림
 - 3장 4절: 중고령 1인가구의 형성과정과 생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결과의 의미가 부각될 수 있도록 주요결과에 대한 도식화, 일부 내용 삭제를 추천함.

- 4장: 미래 중고령자로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함. 연구 대상인 중고령 대신 중장년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배경이 이해될 수 있도록 장 제목 변경을 추천함(예: ‘미래 중고령 1인가구~’).
- 5장 3절: 국외사례연구에서 ‘1인가구에 대한 지원’ VS ‘1인가구 증가를 고려한 법적 제도적 개편’이 같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구분이 필요할 수 있음. 사례별 검토가 필요함. 또한 p.278~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 결합의 인정’은 중고령자를 다루는 본 연구주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의 의미를 서술하면 의미가 있을 것임.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계획한 영역별 주요 분석을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접근방안과 대안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었음. 최종수정 단계에서 독자에게 보다 가독성있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외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보고서 구성 논리성 높음
 - 연구주제와 내용 부합성 높음: 미래 중고령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1인가구 기존 논의 검토, 중고령 1인가구 규모와 특성변화(양적 및 질적 조사 활용), 국외사례 검토 등의 연구내용 수행

- 내용 체계 논리성 높음: 미래 노인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 실행된 연구내용(선행연구, 중고령 1인가구 분석, 중간년 1인가구 삶의 모습과 욕구 분석, 국내 및 중고령 1인가구 정책 및 법 분석) 체계가 논리성이 높음.
- 분석틀 구체성 높음: 중고령 1인가구 과거-현재-미래 분석틀, 중고령 1인가구 현재 삶 모습 분석틀, 국내외 중고령 1인가구 법 및 제도 분석틀 등이 매우 구체적이 논리성을 갖추고 있음.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연구방법 적절성 높음
 - 구체적 연구방법 및 절차 제시: 문헌분석, 2차 자료 양적 분석, 인터뷰 질적 분석, 국내외 사례 법제도 분석 등 연구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국내외 연구동향 궤적 및 최근 동향 검토: 1인가구 국내외 연구에 대한 궤적과 본 연구의 차별성 논의가 명확함.
 - 양적 및 질적 혼합방법의 적절성: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대표성이 확보된 데이터의 2차분석과 사례별 특성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질적조사가 매우 적절함.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연구결과 명료성 높음, 가독성과 기여도 높음
 - 연구보고서 명료성 및 가독성: 서론, 선행연구, 양적 및 질적 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등 연구내용이 매우 명료성이 높음

며, 단문사용과 소재목 활용을 통해서 내용 가독성이 매우 높음.

- 학술적 기여도 높음: 1인가구에 대한 대표성 확보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현재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질적 분석은 1인가구 학술 연구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임.
- 정책활용 가능성 높음: 주거, 의료 및 돌봄, 정서지원, 장사 등 차원에서 1인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기반지식을 생성하여 정책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단,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외부 자문이나 검토과정을 거치면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도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 충실성 높음
- 연구계획서 주요 연구내용
 - 1인가구에 대한 기존 논의: 연구완료
 - 미래 노인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법적·제도적 쟁점 분석: 연구완료
 - 국외사례분석: 연구완료
 - 미래 노인 1인가구 규모와 특성 변화: 연구완료
 - 미래 노인 1인가구 특성 고려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완료
 - 위와 같이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주요연구 내용이 진행이 충실하게 수행되었음.
- 단, 중고령 1인가구를 위한 세부정책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외부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이 수행된다면

연구보고서의 질적 완성도와 정책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 내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이번 연구는 생애관점에서 소득-자산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음. 이를 통해 소득-자산기반 복지체계 정합성과 재구조화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음.
- 무엇보다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식을 소득-자산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점은 흥미롭고 학술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것 같음.
- 추가하면 서론에 이번 연구의 기대효과와 연구한계를 추가하는 것 고려했으면 함.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연구방법은 연구진간 고민 끝에 적절하게 설정하고 계시며, 최근 연구 동향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음. 일부 의견을 드리면,
- 3장의 표현에 대한 검토 필요 : 개인과 가구가 혼재되어 있고, 일부는 가구가중치 사용이며, 생애주기는 가구주 기준임. 기술은 개인단위 형태로 기술되어 있어 독자가 오해할 수 있음. 빈곤도 가구빈곤이며, 개인단위 빈곤이 아니므로 가구빈곤임을 역시 명시했으면 함.
- 4장 코호트 분석인데, 설명은 생애주기와 혼재되어 있어서 독자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음. 그림4-1은 코호트인

데, 패널특성상 마모를 고려하면 표본수가 왜 많이 나타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움.

- 5장 영국, 미국, 노르웨이를 선택한 이유가 실물자산이 높아서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유를 기술해 주셨으면 함. 특히 국가간 비교연구이면 앞에서 분석 연도를 알려주시면 좋는데 소결에 있어서 이를 앞으로 당겨서 설명해 주었으면 함.
- 6장 단순 제도 설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제도에 대한 현황과 더불어 평가나 한계를 기술해 주면 다음 7장의 결론 도출에 도움이 될 것 같음.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연구보고서가 학술적 기여도는 높은 것 같음. 한편의 학술논문을 보는 것 같았음. 반면에 그로 인해 독자 가독성과 정책적 함의 제안에 대한 고민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3장, 4장, 5장 소결이 보완되었으면 함. 현재는 분석결과만 담고 있어서 결론으로 가기 위한 소득-자산기반 복지체계와의 관계성 설명이 추가되었으면 함.
- 4장 코호트 분석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이 충실히 진행되었음. 현재 결론에서 정책제언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추가 기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 연구결과를 통해 현재 사회보장체계를 소득-자산기반 복지체제로 재구조화를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

고,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외부 자문을 통해 세밀하게 다듬어 주셨으면 함.

○ 외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보고서 구성은 소득-자산기반 복지 또는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됨.
- 다만, 주요 개념이 소득-자산기반 복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정의 및 측정에 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또한 소득-자산기반 복지로 접근하는 방식과 자산기반정책으로 접근하는 방식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임.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상관계수 분석의 경우 피어슨, 스피어만, 칸달타우를 이용하고 있는데 분석결과가 너무 차이가 남. 이러한 차이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데, 피어슨을 이용한 단순 작업이 필요해 보임.
- p.53: 자산빈곤의 측정을 순자산으로 했는데 보통 금융자산을 이용한 자산빈곤의 측정이 더 일반적임. 순자산을 이용한 근거에 대한 보충설명 필요해 보임.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전반적으로 다양한 연구결과의 제시를 통해 연구내용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 보임.
 - p.45: 여성의 로그총자산이 남성보다 많게 나타남.
 - p.48:경상소득과 총자산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점차 줄어들

고 있음. 이 의미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해 보임.

- p.54: 소득비빈곤-자산빈곤의 기간별 증가가 주목할 만함. 이런 내용이 뒤 정책 및 함의점에 강조되어 설명될 필요가 있음.
- p.55 & p.103: 분석내용의 차이에 대한 내용. 즉, 제3장 분석에서는 50대부터 65세 전까지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자산 비빈곤의 비율이 높게 나온 반면에, 제4장 분석에서는 50대부터 64세까지 자산빈곤 및 소득-자산빈곤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연구계획서에서 제시된 내용 중 중간심사과정을 통해서 분석 대상이 축소되었음. 대표적으로 소비와 부채 부분의 분석이 삭제되었는데, 연구의 현실적인 분석가능성 및 집중분석 내용을 고려하면 적절해 보임.
- 분석대상을 주로 청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집중한다고 했으나 분석 내용은 청년기 이후의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음. 그렇다면 정책 소개 및 함의점에 청년기 이후의 전반적인 인생주 기상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의 소개 및 함의점의 제시가 필요해 보임.

□ 인구추계 모형 구축과 활용 방안

○ 내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국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코호트 요인 방식, 출산력과 사

망력 추정방식 등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대로 모형을 구현할 때의 한계, 발전방향 등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목차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여짐. 최종워크숍 이후 4장 시뮬레이션과 5장 정책활용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완성된다면 연구주제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됨. 해외 사례로 캐나다, 일본 등 자료접근성 차원에서 선별한 경향이 있는데, 연구계획서상 UNDP, EU 등 인구모형의 한계도 살펴보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형구축의 개선점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통계청의 코호트 요인별 방식으로 인구모형을 구축하고 사망력과 출산력 모듈별로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연구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 분석에 활용된 기준자료와 데이터 등을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연구일정 등을 고려해서 사망력과 출산력에 집중했다는 측면에서 중간워크숍 자문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 사망력과 출산력 모듈을 구축하여 기존 통계청 결과와 비교할 경우, 총인구 뿐 아니라 각 모듈의 특성에 맞게 사망자수, 출생아수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망력과 출산률 모듈 각각으로 비교했는데 이를 조합했을 경우 통계청 결과 비교도 필요해 보임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인구추계모형 구축방향 설정 근거와 모형구조, 사망력과 출산력 모듈 방법론 설명과 한계 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각 장별로 소결로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연구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됨. 5장에서 노동분야와 교육 분야와 중복되는 부분 고려, 보건 의료 분야 등 보고서가 완성된다면, 분야별 기존의 정책 활용사례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는 측면에서 정책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연구계획서 대비로 연구과제가 수행되어 보고서가 작성될 것으로 보여짐
- 계획서상 UNDP 등의 상대적으로 간단한 인구모형의 한계를 언급한 바 있는데, UNDP 모형구조와 결과제시 방식을 간략하게라도 소개하고 한계점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인구모형에서 개선사항으로 연결한다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부각될 것으로 사료됨

○ 외부 자문위원

1.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 본 연구는 인구추계 모형 내재화 필요성과 미래 인구변동 시뮬레이션을 위한 인구추계 모형 구축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인구추계 모형 활용 방안 모색한 것임. 이를 위해 통계청 인구추계의 출산, 사망, 이동의 가정과 코호트-요인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음. 또한 도출한 결과는 통계청 인구추계와 큰 차이가 없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구추계로직의 정합성을 보여준 것으로 보임.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구추계 로직 산정을 위해 인구 변동 관련 국내외 연구 및 정책 동향 파악과 코호트-요인법에 기초

하여 미래 인구를 전망하는 인구추계 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결과를 제시하고, 끝으로 인구추계 모형의 향후 정책연구 활용 방안 검토한 광범위하고 일관적인 연구방법으로 보임.

3.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가독성, 기여도

- 인구추계 관련 용어 설명과 비전문가가 살펴봐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 구성으로 가독성이 높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구추계 결과는 미래 인구변동과 관련하여 연구원 차원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또한 미래 인구변동에 대한 인구 시뮬레이션은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음.

4.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진행 정도의 충실성

- 본 연구는 1차연도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결과이므로 2, 3차 연구가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포괄적인 인구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징화된 인구추계가 제시되기를 바램. 참고로 국토연구원의 격자, 소지역 추계, 국회예산처의 NABO 인구추계시스템은 각 기관의 특징을 반영하는 인구추계임. 이와 유사하게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추계가 완성되기를 바램.

□ 가족과 출산조사 개편 방안 연구

○ 내부 자문위원

- 본 연구는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

전 연구로 이에 부합되는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따라 조사 방법의 차원과 조사 내용의 차원에서 적절한 개편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작성되었음. 내용적 측면에서 보다 논리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려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우선 개편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큰 틀에서 가족과 출산 조사의 목적과 정체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가족과 출산 조사의 다른 영역인 가치관 및 태도, 자녀 양육, 정책 영역에 대한 개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데 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안정적인 조사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 방법에 있어서 민간 조사업체의 조사체계를 사례로 분석하고, 조사 내용에 있어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각 영역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 매우 적절함. 또한 선행 연구나 최근 동향 반영을 위해 가족과 출산조사의 변천 과정과 최근의 주요 개편 내용을 제시한 것이 적절함. 보다 이러한 논의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최근 유사한 조사들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전체적인 보고서의 가독성은 높음. 다만 영역별 개편 방안으로 구성된 각 장이 통일되게 기술되면 보다 가독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유사한 소제목을 정확한 이름으로 통일해야 할 것 같음. 내용에 있어서도 장마다 분석하는 방식이 달라서 적정 수준에서의 통일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각 장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편 방안을 설문 문항으로 구현하면 독자의 이해가 높아지고 보고서가 보다 명료해 질 것으로 생각함.
- 대체로 연구 계획에 따라 연구가 충실하기 수행되었음. 다만

시험조사 부분이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으므로 잘 마무리하여 보고서에 반영되길 기대함.

○ 외부 자문위원

- 보사연의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조사인 가족과출산조사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임. 이 조사의 변천과정, 표본특성, 영역별 개편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 2021년도 조사자료 분석, 리서치업체에 의뢰한 시험조사를 통해 조사절차와 조사환경 참여관찰, 표본 특성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음. 다음 조사에서는 조사방식의 변경(직접 조사가 아니라 리서치업체를 통한 현장조사)을 고려하고 있기에 시험조사에 대한 참여관찰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됨. 3장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데, 이를 보다 자세히 서술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보고서는 가독성이 높고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음. 다음 가족과출산조사의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됨
- 연구계획서에 맞춰 연구가 충실히 진행되었고, 최종워크숍 자료의 완성도를 보아, 이후 마무리 작업을 통해 보고서를 종료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